

# 해양경찰학개론

## 법개정내용(2020~2021)

부산 포세이돈 해양경찰  
김대근 강사

◆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2021. 1. 1. 시행)

◇ 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함께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권 조정 시행과 함께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효율적으로 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경찰행정에 분권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국가 전체의 치안 총량과 현재의 안정적 경찰활동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조직체계의 변화와 추가 소요비용 최소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 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
|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
| 지방경찰청   | 시·도경찰청                     |
| 지방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 경찰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 신설

국가수사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주요내용

가.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각각 구분하여 정함(제4조).

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치안정감)으로 보하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18조).

라. 시·도경찰청장의 임용 관련 사항을 정하고, 소관 사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제28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1. 3. 30] [시행 2021. 7. 1]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시행 2021. 7. 1].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 2021. 7. 1].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

**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 「해양경찰법」(1) [시행 2021. 1. 1.]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법<br>[법률 제16515호, 2019. 8. 20., 제정]                                                                                                                                     | 해양경찰법<br>[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
| <b>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b>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b>국가경찰공무원</b> 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b>국가경찰공무원</b>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b>제12조(해양경찰청장 임명자격)</b>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b>경찰공무원</b> 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b>경찰공무원</b>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
| <b>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b>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b>국가경찰공무원</b> 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br><br>② 해양경찰청 소속 <b>국가경찰공무원</b> 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br><br>③ (생략) | <b>제13조(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b> ①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b>경찰공무원</b> 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br><br>② 해양경찰청 소속 <b>경찰공무원</b> 의 계급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한다.<br><br>③ (현행과 같음) |

◆ 「해양경찰법」(2) [시행 2021. 1. 14.]  
해양경찰청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제한된다.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양경찰법’ 개정안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4명, 찬성 211명, 반대 7명, 기권 26명으로 해양경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양경찰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사부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사부서장은 해양경찰청 외부에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부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 출신은 중임이 금지된다. 해경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 보장한다는 취지다.

| 해양경찰법<br>[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 해양경찰법<br>[법률 제17904호, 2021. 1. 13., 일부개정]                                                                                                                                      |
|--------------------------------------------|--------------------------------------------------------------------------------------------------------------------------------------------------------------------------------|
| <b>제11조(해양경찰청장)</b> ① ~ ④ (생략)<br><br><신설> | <b>제11조(해양경찰청장)</b> ① ~ ④ (현행과 같음)<br><br>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해양주권을 침해하거나 대형재난의 발생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긴급 |

|                                                                                                                                                                                                                                                                                                           |                                                                                                                                                                                                                                                                                                                                                                                                                                                                                                                                         |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p> <p>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사부서의 장이 제5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⑨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b>제14조(직무)</b>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b>경호·경비·대테러작전</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b>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 <p><b>제14조(직무)</b>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b>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b>피해자 보호</b>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b>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b>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p> <p>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p>                                                                                                                                                                        |
| <p>&lt;신 설&gt;</p>                                                                                                                                                                                                                                                                                        | <p><b>제15조의2(수사의 지휘·감독)</b></p> <p>① 수사부서의 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② 수사부서의 장은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p> <p>1. 10년 이상 해양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p>                                                                                                                                                                                                                                                                        |

|  |                                                                                                                                                                                                                                                                                                                                                                                                                                                                                                                                                                                                                                                                                                                                                                                                                                                                                                                                                                                                                                                                                      |
|--|--------------------------------------------------------------------------------------------------------------------------------------------------------------------------------------------------------------------------------------------------------------------------------------------------------------------------------------------------------------------------------------------------------------------------------------------------------------------------------------------------------------------------------------------------------------------------------------------------------------------------------------------------------------------------------------------------------------------------------------------------------------------------------------------------------------------------------------------------------------------------------------------------------------------------------------------------------------------------------------------------------------------------------------------------------------------------------------|
|  | <p>「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u>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u>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u></p> <p>3. <u>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u></p> <p>4.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해양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u></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u>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u></p> <p>③ <u>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수사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u></p> <p>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u>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u></p> <p>2. <u>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3. <u>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4. <u>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2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u>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④ <u>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u>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u>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사부서의 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u></p> <p>⑤ <u>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내부를 대상으로 임명하는 경우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
|--|--------------------------------------------------------------------------------------------------------------------------------------------------------------------------------------------------------------------------------------------------------------------------------------------------------------------------------------------------------------------------------------------------------------------------------------------------------------------------------------------------------------------------------------------------------------------------------------------------------------------------------------------------------------------------------------------------------------------------------------------------------------------------------------------------------------------------------------------------------------------------------------------------------------------------------------------------------------------------------------------------------------------------------------------------------------------------------------|

◆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 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
4.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이하 “수사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사국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제5조(수사국장의 수사지휘·감독)**

①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수사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수사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2020. 12. 22. [시행 2021. 1. 1.]

◇ 개정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나.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8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16조제1항제4호).

다.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제7조(임용권자)

-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④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근속승진)

-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

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추가 신설

#####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 조문 이동

#####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 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경찰헌장 [2021. 1. 1]

해양경찰 헌장은 1998년 제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문화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이념과 정신을 강조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아우를 수 있도록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헌장을 새롭게 개정했다. 기존 헌장이 해양경찰로서의 사명감을 중시했다면 개정된 헌장은 공직자이자 해양경찰로서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헌장 전문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와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했다. 본문에서는 조직의 독자적 특성을 반영해 ‘바다의 수호자’, ‘정의의 실현자’, ‘국민의 봉사자’, ‘해양의 전문가’로서 해양경찰 구성원이 지켜야 할 4가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해양경찰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태도를 보다 더 명확하고 쉽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행동지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 양 경 찰 헌 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 ‘국민의 봉사자’로서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성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1) [2018. 12. 24. ⇒ 2020. 12. 22] [시행 2021.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는 한편,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고,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br>[법률 제16036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br>[법률 제1768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
| <p><b>제1조(목적)</b>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생략)</p> | <p><b>제1조(목적)</b>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p><b>제2조(직무의 범위)</b>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 3. (생략)</p> <p>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5. ~ 7. (생략)</p>                   | <p><b>제2조(직무의 범위)</b>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p>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p> <p>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p> <p>2의2. 범죄피해자 보호</p> <p>3.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p> <p>4.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p> <p>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p> <p>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p> <p>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p> |
| <p><b>제8조의2(국제협력)</b>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p> <p>&lt;신설&gt;</p>         | <p><b>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b> [시행 21. 3. 23]</p> <p>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
|-------|------------------------------------------------------------------------------------------------------------------------|
| <신 설> | <b>제8조의3(국제협력)</b><br>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1. 3. 23] |
|-------|------------------------------------------------------------------------------------------------------------------------|

◆ 「경찰관 직무집행법」(2) [2020. 12. 22. ⇒ 2020. 12. 22] [시행 2021. 1. 1]

국가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지방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경찰위원회 ⇒ 국가경찰위원회

◆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 2021. 1. 1]

지방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지방경찰청 ⇒ 시·도경찰청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1. 1. 5]

| <b>경찰공무원 복무규정</b><br>[대통령령 제28215호, 2017. 7. 26., 타법개정]                                                                                                                  | <b>경찰공무원 복무규정</b><br>[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
| <b>제3조(기본강령)</b>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b>복무하여야</b> 한다.<br>1.·2. (생 략)<br>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b>신애</b> 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br>4. ~ 6. (생 략) | <b>제3조(기본강령)</b>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b>복무해야</b> 한다.<br>1. 경찰사명<br>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br>2. 경찰정신<br>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br>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b>존중</b> 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br>4. 단결<br>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br>5. 책임<br>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br>6. 성실·청렴 |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 국가공무원법(1) [시행 2020. 7. 30]

#### ◇ 개정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인재 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인재 정보의 수집 범위 등을 확대하며, 공직 내 다양성 확대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후보자 외에 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발굴·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3).

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제26조의6 신설).

| 국가공무원법<br>[법률 제15857호, 2018. 10. 16.,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br>[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
|-------------------------------------------------------------------------------------------------------------------------------------------------------------------------------------------------------------------------------------------------------------------------------------------------------------------------------------|----------------------------------------------------------------------------------------------------------------------------------------------------------------------------------------------------------------------------------------------------------------------------------------------------------------------------------------------------------------|
| <b>제2조(공무원의 구분)</b> ① (생략)<br>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략)<br>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b>직원</b>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br>③·④ (생략) | <b>제2조(공무원의 구분)</b> ① (현행과 같음)<br>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현행과 같음)<br>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b>직원</b> , <b>경호공무원</b>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br>③·④ (현행과 같음) |
| <신설>                                                                                                                                                                                                                                                                                                                                | <b>제17조의2(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b><br>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                                                                                                                                                                                                                                                                     |

|                                                                                                                                                                                                                                                                                                                                                                                                                                                                                                                                                                                                                                                                                                                                                                                                                                                                                                                                                      |                                                                                                                                                                                                                                                                                                                                                                                                                                                                                                                                                                                                                                                                                                                                                                                                                                                                                                                                                                                                                                                                                                                                                                                                                                                                 |
|------------------------------------------------------------------------------------------------------------------------------------------------------------------------------------------------------------------------------------------------------------------------------------------------------------------------------------------------------------------------------------------------------------------------------------------------------------------------------------------------------------------------------------------------------------------------------------------------------------------------------------------------------------------------------------------------------------------------------------------------------------------------------------------------------------------------------------------------------------------------------------------------------------------------------------------------------|-----------------------------------------------------------------------------------------------------------------------------------------------------------------------------------------------------------------------------------------------------------------------------------------------------------------------------------------------------------------------------------------------------------------------------------------------------------------------------------------------------------------------------------------------------------------------------------------------------------------------------------------------------------------------------------------------------------------------------------------------------------------------------------------------------------------------------------------------------------------------------------------------------------------------------------------------------------------------------------------------------------------------------------------------------------------------------------------------------------------------------------------------------------------------------------------------------------------------------------------------------------------|
|                                                                                                                                                                                                                                                                                                                                                                                                                                                                                                                                                                                                                                                                                                                                                                                                                                                                                                                                                      | <p>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신고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p>                                                                                                                                                                                                                                                                                                                                                                                                                                                                                                                                                                                                                                                                                                                                                                                                                                                                                                                                                                                                                                                                    |
| <p><b>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b>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b>국가고시 시험</b> 위원, 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를 희망하거나 그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이하 “<b>공직후보자</b>”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b>공직후보자</b>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b>공직후보자</b>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b>공직후보자</b>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상 목적으로 제1항의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b>공직후보자</b>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 <p><b>제19조의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b>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b>공무원 채용시험</b>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b>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b>(이하 “<b>공직후보자등</b>”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b>공직후보자등</b>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p> <p>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b>공직후보자등</b>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 미리 서면이나 전자 매체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이 요구하면 관리하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 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b>공직후보자등</b>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관한 인사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b>국가기관등의 장</b>”이라 한다)은 인사상 목적 또는 <b>공직에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의 활용을 위하여</b>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인사혁신처장은 <b>공직후보자등</b>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와 수집 절차,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신 설>                                                                                                                                                                                                                                                                                                                                                                                                                                                                                                                                                                                                                                                                                                                                                                                                                                                                                                                                                | <b>제26조의6(차별금지)</b>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                                                                                                                                                                                                                                                                                                                                                                                                                                                                                                                                                                                                                                                                                                                                                                                                                                                                                                                                                                                                                                                                                                                                                                                                                          |

|                                                                                                                                                                                                                                                                                                                                                                                                                                                                                                      |                                                                                                                                                                                                                                                                                                                                                                                                                                                                                                                                                                                                                                                                                                                                                                                                                                                                                              |
|------------------------------------------------------------------------------------------------------------------------------------------------------------------------------------------------------------------------------------------------------------------------------------------------------------------------------------------------------------------------------------------------------------------------------------------------------------------------------------------------------|----------------------------------------------------------------------------------------------------------------------------------------------------------------------------------------------------------------------------------------------------------------------------------------------------------------------------------------------------------------------------------------------------------------------------------------------------------------------------------------------------------------------------------------------------------------------------------------------------------------------------------------------------------------------------------------------------------------------------------------------------------------------------------------------------------------------------------------------------------------------------------------------|
|                                                                                                                                                                                                                                                                                                                                                                                                                                                                                                      | <p>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p>                                                                                                                                                                                                                                                                                                                                                                                                                                                                                                                                                                                                                                                                                                                                                                                                                                  |
| <p><b>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③ (생략)</b></p> <p>④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⑤ (생략)</p>                                                                                                                                                                                                                                                                          | <p><b>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
| <p><b>제71조(휴직) ①·② (생략)</b></p> <p>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p> <p>④·⑤ (생략)</p>                                                                                                                                                                                                                                                                                                                               | <p><b>제71조(휴직)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lt;후단 삭제&gt;</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p><b>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b></p> <p>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③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b>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b></p> <p>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t;후단 삭제&gt;</p> <p>1. <u>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u></p> <p>2. <u>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u></p> <p>3. <u>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u></p> <p>4. <u>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u></p> <p>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p> <p>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p> |



|                                                                                                                                                                                                                                      |                                                                                                                                                                                                                                                                                                                                                                                                                                                            |
|--------------------------------------------------------------------------------------------------------------------------------------------------------------------------------------------------------------------------------------|------------------------------------------------------------------------------------------------------------------------------------------------------------------------------------------------------------------------------------------------------------------------------------------------------------------------------------------------------------------------------------------------------------------------------------------------------------|
| <b>제79조(징계의 종류)</b>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b>제79조(징계의 종류)</b>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 <b>제82조(징계 등 절차) ①</b> (생략)<br>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b>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b> 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br><신설><br><신설><br><신설><br><신설> | <b>제82조(징계 등 절차) ①</b> (현행과 같음)<br>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b>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b>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br>1. <b>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b><br>2. <b>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b><br>3. <b>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b><br>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

◆ 「국가공무원법」 (2) [시행 2021. 1. 12]

| <b>국가공무원법</b><br>[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b>국가공무원법</b><br>[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
|--------------------------------------------------------------------------------------------------------|--------------------------------------------------------------------------------------------------|
| <b>제33조(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1. <b>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b><br>2. ~ 8. (생략) | <b>제33조(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br>1. <b>피성년후견인</b><br>2. ~ 8. (현행과 같음) |

◆ 「경찰공무원 징계령」(1) [시행 2020. 6. 16]

◇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심의 대상자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출석 통지서 도달 기한을 연장하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제6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신설)

1)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중전에는 중앙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 보통징계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징계위원회를 각각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2)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과 민간부문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임원급 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 대상을 확대함.

나.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 도달 기한 연장(제12조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대상자가 의견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 통지서 도달 기한을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에서 5일 전까지로 연장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br>[대통령령 제30020호, 2019. 8. 6.,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br>[대통령령 제30783호, 2020. 6. 16., 일부개정]                                                                                                                                                                                                                                                                                                                                                                                                                |
|---------------------------------------------------------------------------------------------------------------------------------------------------------------------------------------------------------------------------------------------------------------------------------------------------------------------------------------------------------------------------------------------------------------------------------------------------------------------------------------------------------------------------------------------|----------------------------------------------------------------------------------------------------------------------------------------------------------------------------------------------------------------------------------------------------------------------------------------------------------------------------------------------------------------------------------------------------------------------------------------------------------------|
| <p><b>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 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b>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b> 한다.</p> <p>1. 중앙징계위원회<br/>가.·나. (생략)</p> <p><b>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b></p> | <p><b>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b> ① <u>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51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u> 한다.</p> <p>1. 중앙징계위원회<br/>가.·나. (현행과 같음)</p> <p><u>다. 총경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u></p> |

|                                                                                                                                                                                                           |                                                                                                                                                                                                                                                                                                                                                                                                                                |
|-----------------------------------------------------------------------------------------------------------------------------------------------------------------------------------------------------------|--------------------------------------------------------------------------------------------------------------------------------------------------------------------------------------------------------------------------------------------------------------------------------------------------------------------------------------------------------------------------------------------------------------------------------|
| <p>&lt;신 설&gt;</p> <p>2. 보통징계위원회<br/>가.·나. (생 략)</p> <p>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p> <p>&lt;신 설&gt;</p> <p>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p>                            | <p>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보통징계위원회<br/>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경찰기관(해당 경찰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서 근무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p> <p>라.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된다.</p> |
| <p><b>제7조</b>(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b>제7조</b>(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p> <p>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p>                           |
| <p><b>제8조</b>(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p>                                                                                | <p><b>제8조</b>(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p> <p>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징계등 사건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p>                                                                                                                                                                                                                                                        |

|                                                                                                                                                                                                                                                                                                                                                                               |                                                                                                                                                                                                                                                                                                                                                                                                                                                                                                                                                                                                                                                                                                                                                                             |
|-------------------------------------------------------------------------------------------------------------------------------------------------------------------------------------------------------------------------------------------------------------------------------------------------------------------------------------------------------------------------------|-----------------------------------------------------------------------------------------------------------------------------------------------------------------------------------------------------------------------------------------------------------------------------------------------------------------------------------------------------------------------------------------------------------------------------------------------------------------------------------------------------------------------------------------------------------------------------------------------------------------------------------------------------------------------------------------------------------------------------------------------------------------------------|
| <p><b>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b>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b>3일</b>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b>하여야</b> 한다.</p> <p>② ~ ⑤ (생략)</p>                                                                                                                                                                                                       | <p><b>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b></p> <p><b>제12조(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b>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b>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b>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b>해야</b>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p><b>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b>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b>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b>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p> <p>②·③ (생략)</p>                                                                                                  | <p><b>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b>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b>과반수</b>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b>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b>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b>받았을</b>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b>위원</b>의 기피 여부를 <b>결정하여야</b>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b>위원</b>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 <p><b>제15조(제척, 기피 및 회피)</b>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li> <li>2.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li> <li>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1항제3호의 사유로 다시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 해당 징계등 사건의 조사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경우</li> </ol> <p>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li> <li>2.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ol> <p>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b>받은</b> 때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결로써 해당 <b>위원장 또는 위원</b>의 기피 여부를 <b>결정해야</b>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b>위원장 또는 위원</b>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

|                                                                                        |                                                                                                                      |
|----------------------------------------------------------------------------------------|----------------------------------------------------------------------------------------------------------------------|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b>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b>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b>심의·의결</b> 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b>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b>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b>심의·의결</b> 을 회피해야 하며, <b>제2항제2호에 해당하면</b> 회피할 수 있다. |
| ⑤·⑥ (생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경찰공무원 징계령」 (2) [시행 2021. 1. 1]  
지방경찰청 ⇒ 시·도 경찰청

| 경찰공무원 징계령<br>[대통령령 제30783호, 2020. 6. 16., 일부개정]                                                                                                                                                                                                                   | 경찰공무원 징계령<br>[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
|-------------------------------------------------------------------------------------------------------------------------------------------------------------------------------------------------------------------------------------------------------------------|------------------------------------------------------------------------------------------------------------------------------------------------------------------------------------------------------------------------------------------------------------------------|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생략)<br>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b>지방경찰청</b> ,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합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 제3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현행과 같음)<br>②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두고, 보통징계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b>시·도경찰청</b> ,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합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
|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② (생략)<br>③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b>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b>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br>④ (생략)                                                                                                  | 제5조(관련 사건의 관할)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b>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b>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br>④ (현행과 같음)                                                                                              |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 개정이유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제195조 신설).

나.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제196조).

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197조의2 신설).

라.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 신설).

마.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4 신설).

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둔(제221조의5 신설).

사.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제245조의5 신설).

아.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제245조의6 신설).

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제245조의7 신설).

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제245조의8 신설).

카.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제245조의10 신설).

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제312조).

| 형사소송법<br>[법률 제16850호, 2019. 12. 31.,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br>[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br>[시행 2021. 1. 1.]                                                                                |
|---------------------------------------------------------------------------------------------------|---------------------------------------------------------------------------------------------------------------------------------------------|
| 제7장 송달                                                                                            | <삭 제>                                                                                                                                       |
| <b>제195조(검사의 수사)</b>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br><br><신 설>                 | <b>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b>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br><br>②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b>제196조(사법경찰관리)</b>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 | <b>제196조(검사의 수사)</b>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                                                                                                                                                                                                                                                                       |                                                                                                                                                                                                                                                                                                                                                                                                                                                                                                                                                                                                                                                                                                                              |
|-----------------------------------------------------------------------------------------------------------------------------------------------------------------------------------------------------------------------------------------------------------------------|------------------------------------------------------------------------------------------------------------------------------------------------------------------------------------------------------------------------------------------------------------------------------------------------------------------------------------------------------------------------------------------------------------------------------------------------------------------------------------------------------------------------------------------------------------------------------------------------------------------------------------------------------------------------------------------------------------------------------|
| <p>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p> |                                                                                                                                                                                                                                                                                                                                                                                                                                                                                                                                                                                                                                                                                                                              |
| <p><b>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b>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p> <p>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이전</p>                                                                                                                               | <p><b>제197조(사법경찰관리)</b>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p> <p>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p> <p>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p>                                                                                                                                                                                                                                                                                                                                                                                                                                                                                                                                            |
| <p>&lt;신 설&gt;</p>                                                                                                                                                                                                                                                    | <p><b>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b>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
| <p>&lt;신 설&gt;</p>                                                                                                                                                                                                                                                    | <p><b>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b>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제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p> <p>⑦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p> <p>⑧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p> |



|       |                                                                                                                                                                                                                                                                                                                                                                                                                      |
|-------|----------------------------------------------------------------------------------------------------------------------------------------------------------------------------------------------------------------------------------------------------------------------------------------------------------------------------------------------------------------------------------------------------------------------|
|       | <p>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p>                                                                                                                                                                                                                                                                                                                                             |
| <신 설> | <p><b>제197조의4(수사의 경합)</b>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p>                                                                                                                                                                                |
| <신 설> | <p><b>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b>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p> <p>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
| <신 설> | <p><b>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b>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b>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b>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b>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b>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신 설> | <p><b>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b>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p>                                                                                                                                                                                                                                       |



|                                                                                                                                                                                                                                                                                                                                                                                                                                  |                                                                                                                                                                                                                                                                                                                                                                                                                                                                                           |
|----------------------------------------------------------------------------------------------------------------------------------------------------------------------------------------------------------------------------------------------------------------------------------------------------------------------------------------------------------------------------------------------------------------------------------|-------------------------------------------------------------------------------------------------------------------------------------------------------------------------------------------------------------------------------------------------------------------------------------------------------------------------------------------------------------------------------------------------------------------------------------------------------------------------------------------|
| <p>&lt;신 설&gt;</p>                                                                                                                                                                                                                                                                                                                                                                                                               | <p><b>제245조의9(검찰청 직원)</b>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p> <p>③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p> <p>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p>&lt;신 설&gt;</p>                                                                                                                                                                                                                                                                                                                                                                                                               | <p><b>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b>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p> <p>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p> <p>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p> <p>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p> <p>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p><b>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b>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③ ~ ⑥ (생략)</p> | <p><b>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b>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

### ◆ 「해양경비법」 [시행 2021. 3. 30]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등"의 정의에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추가하여 그 정의를 명확화·구체화하고, 대테러 작전의 수행 및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예방·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 대상기관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양경비법<br>[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해양경비법<br>[법률 제17798호, 2020. 12. 29., 일부개정]                                                                                                                                                                                                                                                                                                                                  |
|--------------------------------------------------------------------------------------------------------------------------------------------------------------------------------------------------------------------------------------------------------------------------------|-----------------------------------------------------------------------------------------------------------------------------------------------------------------------------------------------------------------------------------------------------------------------------------------------------------------------------------------------------------------------------|
|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 략)</p> <p>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p> <p>11. (생 략)</p>                                                                  |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
| <p><b>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b> ①·② (생 략)</p> <p>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생 략)</p>                                                                                              | <p><b>제6조(해양경비기본계획의 수립)</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
| <p>&lt;신 설&gt;</p>                                                                                                                                                                                                                                                             | <p><b>제16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의 수립)</b></p> <p>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대테러작전의 수행 및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에 따른 테러예방대책의 원활한 수립과 해양에서의 효율적인 테러 예방·대응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p><b>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b>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⑤ (생 략)</p> | <p><b>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사용허가 등의 통보)</b>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경비수역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 1]</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해양경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 해양경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0508호, 2020. 3. 3., 일부개정]                                                                          | 해양경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
|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생략)<br>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投索銃)<br>② (생략) | 제5조(경찰장비·경찰장구의 종류 및 사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현행과 같음)<br>2. 경찰장구: 페인트볼 및 투색총(줄을 쏘도록 만든 특수 총을 말한다)<br>② (현행과 같음) |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2020. 8. 28 → 2021. 3. 30]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77호, 2021. 3. 30., 일부개정]                                                                                                                                                                                                                                                                                                         |
|--------------------------------------------------|----------------------------------------------------------------------------------------------------------------------------------------------------------------------------------------------------------------------------------------------------------------------------------------------------------------------------------------------------------|
| <신 설>                                            | 제2조의2(해양 대테러 계획 등의 내용)<br>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 대테러 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br>1. <u>국내외 테러 정세 및 전망 분석</u><br>2. <u>해양 대테러 조직·인력·시설·장비의 확충·관리</u><br>3. <u>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제도 개선</u><br>4. <u>해양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교환</u><br>5. <u>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u><br>6. <u>그 밖에 해양 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u>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1) [2020. 3. 31 ⇒ 2020. 10. 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추가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과 경비합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20명, 순경 32명, 9

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0572호, 2020. 3. 31.,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095호, 2020. 10. 7., 일부개정]                                                                                                                                                                                       |
|------------------------------------------------------------------------------------------------------------------------------------------------------------------------------------------------------------|----------------------------------------------------------------------------------------------------------------------------------------------------------------------------------------------------------------------------------------------|
| <p><b>제8조(기획조정관)</b> ① 기획조정관 밑에 <b>국제협력관</b> 1명을 둔다.</p> <p>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b>국제협력관</b>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p> <p>③ (생략)</p> <p>④ <b>국제협력관</b>은 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 <p><b>제8조(기획조정관)</b> ① 기획조정관 밑에 「<b>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b>」 제12조에 따른 <b>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b> 1명을 둔다.</p> <p>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b>정책관등 1명</b>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
| <p><b>제16조(위임규정)</b>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b>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b>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 <p><b>제16조(위임규정)</b>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b>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b>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② 「<b>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b>」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b>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b></p>       |
| <p><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b>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b>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 <p><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b>7퍼센트를 넘지 않는</b>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p><b>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b>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b>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 <p><b>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b>7퍼센트를 넘지 않는</b>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 [2020. 10. 7 ⇒ 2021. 1. 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095호, 2020. 10. 7.,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
| <p><b>제10조(운영지원과)</b> ① (생략)</p> <p>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문서의 <b>분류·수발·보존</b>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p> <p>4. ~ 8. (생략)</p> | <p><b>제10조(운영지원과)</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문서의 <b>분류·접수·발송·보존</b>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p> <p>4. ~ 8. (현행과 같음)</p> |
| <p><b>제11조(경비국)</b> ①·② (생략)</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 <p><b>제11조(경비국)</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

|                                                                                                                   |                                                                                                                               |
|-------------------------------------------------------------------------------------------------------------------|-------------------------------------------------------------------------------------------------------------------------------|
| 1. · 2. (생략)<br>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b>이로</b> 경비<br>4. ~ 11.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br>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b>조업</b> 경비<br>4. ~ 11. (현행과 같음)                                                         |
| <b>제15조(장비기술국)</b> ① · ② (생략)<br>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4. (생략)<br><b>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b><br>6. ~ 9. (생략) | <b>제15조(장비기술국)</b>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4. (현행과 같음)<br><b>5. 경찰복제 및 의복의 보급·개선</b><br>6. ~ 9. (현행과 같음)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3) [2021. 1. 5 ⇒ 2021. 1. 1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의 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부서와 비수사부서의 분리를 위하여 수사정보국을 수사국으로 개편하여 수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던 국제협력관을 국제정보국으로 개편하여 보안 및 국제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수사 및 보안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3개 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6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총경 6명, 경정 5명, 경감 13명, 경위 5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1명(경정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총경 1명)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00명 중 30명(경장 12명, 순경 18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0명(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7명, 경사 15명, 경장 19명, 순경 23명, 9급 1명)과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대상 정원 225명(경장 102명, 순경 123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399호, 2021. 1. 14., 일부개정]                                                                 |
|-------------------------------------------------------------------------------------------------------------------------------------------------------------------------------------------------------------------------------------------------------------------------------------------------------------|------------------------------------------------------------------------------------------------------------------------|
| <b>제6조(하부조직)</b> ① 해양경찰청에 <b>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b>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br>② (생략)                                                                                                                                                                                                                       | <b>제6조(하부조직)</b> ① 해양경찰청에 <b>운영지원과·경비국·구조안전국·수사국·국제정보국·해양오염방제국</b>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br>② (현행과 같음)                          |
| <b>제8조(기획조정관)</b> ①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br>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br>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br>1. ~ 13. (생략)<br>14.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업무<br>15.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 <b>제8조(기획조정관)</b> ①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보한다.<br><삭 제><br>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br>1. ~ 13. (현행과 같음)<br><삭 제><br><삭 제> |

|                                                                                                                                                                                                                                                             |                                                                                                                                                                                                                                                                                                                                          |
|-------------------------------------------------------------------------------------------------------------------------------------------------------------------------------------------------------------------------------------------------------------|------------------------------------------------------------------------------------------------------------------------------------------------------------------------------------------------------------------------------------------------------------------------------------------------------------------------------------------|
| <p>16.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업무</p> <p>17.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p> <p>18. 국제해양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p> <p>④ (생략)</p>                                                                                                                                    |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④ (현행과 같음)</p>                                                                                                                                                                                                                                                                  |
| <p><b>제13조(수사정보국)</b> ① 수사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p> <p>② (생략)</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p> <p>5.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p> <p>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p> <p>7. (생략)</p> <p>8. 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p> <p>9. 국제형사 관련 업무</p> | <p><b>제13조(수사국)</b> ① 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7.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
| <p>&lt;신설&gt;</p>                                                                                                                                                                                                                                           | <p><b>제13조의2(국제정보국)</b></p> <p>① 국제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p> <p>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p> <p>2. <u>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u></p> <p>3. <u>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p> <p>4. <u>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p> <p>5. <u>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u></p> <p>6. <u>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p> |
| <p><b>제16조(위임규정)</b>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p><b>제16조(위임규정)</b>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p><b>제18조(원장)</b>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b>치안감</b>으로 보한다.</p> <p>② (생략)</p>                                                                                                                                                                                | <p><b>제18조(원장)</b>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b>경무관</b>으로 보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
| <p><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생략)</p> <p>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b>17명</b>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p>                                                                      | <p><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b>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b>20명</b>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p>                                                                                                                                                  |

|                                                                                                                                                                                                                                                                                                                                     |                                                                                                                                                                                                                                                                                                                                         |
|-------------------------------------------------------------------------------------------------------------------------------------------------------------------------------------------------------------------------------------------------------------------------------------------------------------------------------------|-----------------------------------------------------------------------------------------------------------------------------------------------------------------------------------------------------------------------------------------------------------------------------------------------------------------------------------------|
| 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 <b>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b><br><b>②</b>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b>44명</b> 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b>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b><br><b>②</b>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b>48명</b> 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b>제37조(평가대상 정원) ①</b>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b>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b> 은 별표 6과 같다.<br><b>②</b>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b>정원</b> 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b>제3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b>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b>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b> 은 별표 6과 같다.<br><b>②</b>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b>조직 및 정원</b> 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4) [2021. 1. 14 ⇒ 2021. 2. 2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399호, 2021. 1. 14.,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br>[대통령령 제31495호, 2021. 2. 25., 일부개정]                                                                                                             |
|---------------------------------------------------------------------------------------------------------------------------------------------------------------|--------------------------------------------------------------------------------------------------------------------------------------------------------------------|
| <b>제27조(하부조직) ①</b>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br><b>② (생략)</b>                                                                                     | <b>제27조(하부조직) ①</b>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각각 안전총괄부를 둔다.<br><b>② (현행과 같음)</b>                                                                           |
| <b>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b>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br><b>②·③ (생략)</b>                                                               | <b>제28조(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①</b>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각 1명을 둔다.<br><b>②·③ (현행과 같음)</b>                                               |
| <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b><br><b>&lt;신설&gt;</b>                                                                                                  | <b>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b><br><b>③</b>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제9장 한시정원                                                                                                                                                      | 제9장 삭제 <2021.2.25>                                                                                                                                                 |
| <b>제38조(한시정원)</b>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경찰청에 두며, 별표 7의 정원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 <삭제>                                                                                                                                                               |

|                                                              |  |
|--------------------------------------------------------------|--|
|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0. 10. 8 → 2021. 1. 14]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40호, 2020. 10. 8.,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58호, 2021. 1. 14., 일부개정]                                                                                                                                                                                                                                                                                                                                                                                                                                                                                                                                                                                                                                                                                                                                                                                                                                                                                                                           |
|--------------------------------------------------------------------------------------------------------------------------------------------------------------------------------------------------------------------------------------------------------------------------------------------------------------------------------------------------------------------------------------------------------------------------------------------------------------------------------------------------------------------------------------------------------|---------------------------------------------------------------------------------------------------------------------------------------------------------------------------------------------------------------------------------------------------------------------------------------------------------------------------------------------------------------------------------------------------------------------------------------------------------------------------------------------------------------------------------------------------------------------------------------------------------------------------------------------------------------------------------------------------------------------------------------------------------------------------------------------------------------------------------------------------------------------------------------------------------------------------------------------------------------------------------------|
| <p><b>제3조(기획조정관)</b>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p> <p>② 국제협력관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p>&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br/>&lt;신 설&gt;</p> <p>③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p> | <p><b>제3조(기획조정관)</b>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인사담당관은 총경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p> <p>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관리</li> <li>4의2. 해양경찰위원회의 간사업무에 관한 사항</li> <li>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li> <li>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li> <li>7.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li> <li>8.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li> <li>9. 각종 통계관리</li> <li>1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p>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li> <li>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li> <li>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li> <li>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li> <li>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li> <li>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li> <li>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



|                                                                                                                                                                                                                                                                                                                                                                                                                                                                                                                                                                                                                                                                         |                                                                                                                                                                                                                                                                                                                                                                                                                                                                                                                                                                                                                                                                                                                                                                                                                                                                              |
|-------------------------------------------------------------------------------------------------------------------------------------------------------------------------------------------------------------------------------------------------------------------------------------------------------------------------------------------------------------------------------------------------------------------------------------------------------------------------------------------------------------------------------------------------------------------------------------------------------------------------------------------------------------------------|------------------------------------------------------------------------------------------------------------------------------------------------------------------------------------------------------------------------------------------------------------------------------------------------------------------------------------------------------------------------------------------------------------------------------------------------------------------------------------------------------------------------------------------------------------------------------------------------------------------------------------------------------------------------------------------------------------------------------------------------------------------------------------------------------------------------------------------------------------------------------|
| <p>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2.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li> <li>4. 각종 지시사항의 총괄·관리</li> <li>5.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li> <li>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및 결산</li> </ol> <p>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li> <li>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li> <li>3. 지식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운영</li> <li>4. 민원(공무원제안 및 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운영</li> <li>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li> <li>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li> <li>7. 성과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li> <li>9.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li> <li>10. 해양경찰청장비창의 사업성과 평가</li> <li>11.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li> <li>12.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 관련 업무 13. 규제개혁 관련 업무</li> </ol> <p>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li> <li>3.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li> <li>4.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li> <li>6. 인사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li> </ol> <p>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훈련 일반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평가에 관한 사항</li> <li>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채용·승진 시험</li> <li>4. 직장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li> </ol> <p>&lt;삭 제&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li> </ol> |
| <p><b>제8조(수사정보국)</b> ① 수사정보국에 수사과·형사과·정보과·외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되, 수사과장·형사과장·정보과장 및 외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p> <p>②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li> </ol>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유치관리에 관한 사항</li> <li>5. 수사민원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및 처리</li> </ol>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생 략)</li> </ol> <p>③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li> </ol>                                                                                                           | <p><b>제8조(수사국)</b> ① 수사국에 수사기획과·수사과·형사과 및 과학수사팀을 두며, 수사기획과장·수사과장·형사과장은 총경으로, 과학수사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p> <p>② 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수사 관련 법무지원 업무</li> <li>3. 영장심사·수사심사에 관한 제도·정책 수립 및 소속기관 영장·수사심사관 지도·관리</li> <li>4. 인권보호정책 수립·지도 및 수사경찰 청렴도 평가 관리</li> <li>5. 수사기록물 및 통합증거물 관리</li> <li>6. 수사와 관련된 위원회 운영 및 관리</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사민원 사건(고소·고발·진정·탄원)의 접수 및 처리</li> </ol>                                                                                                                                                                                                                                                                                                                                                 |

|                                                                                                                                                                                                                                                                                                                                                                                                                                                                                                                                                                                   |                                                                                                                                                                                                                                                                                                                                                                                                                                                                                                                                                                                                          |
|-----------------------------------------------------------------------------------------------------------------------------------------------------------------------------------------------------------------------------------------------------------------------------------------------------------------------------------------------------------------------------------------------------------------------------------------------------------------------------------------------------------------------------------------------------------------------------------|----------------------------------------------------------------------------------------------------------------------------------------------------------------------------------------------------------------------------------------------------------------------------------------------------------------------------------------------------------------------------------------------------------------------------------------------------------------------------------------------------------------------------------------------------------------------------------------------------------|
| <p>2. 범죄기록의 수집·관리·지도</p> <p>3.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지도</p> <p>4.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지도 및 조정</p> <p>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p> <p>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p> <p>④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2.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4.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p> <p>5.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6.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기획·지도 및 조정</p> <p>7. 보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p> <p>⑤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외사수사 및 외사정보에 관한 기획 및 지도·조정</p> <p>2. 밀입·출국, 밀수 등 외사사범의 수사</p> <p>3.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p> <p>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p> | <p>2.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기획·조정·지도·통제에 관한 사항</p> <p>3. 범죄통계의 관리 및 분석</p> <p>4. 유치장 및 유치인 관리 업무</p> <p>5. 수사사건 관련 지시사항 관리</p> <p>&lt;삭 제&gt;</p> <p>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형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2. 범죄기록의 수집·관리·지도</p> <p>3.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사·지도</p> <p>4. 광역수사업무와 그 기획·지도 및 조정</p> <p>5.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의 처리, 수사 및 지도</p> <p>6. 지능범죄 등에 관한 기획수사 및 지도</p> <p>7. 중대 안보위해범죄에 대한 수사지도</p> <p>⑤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과학수사 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p> <p>3.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에 관한 사항</p> <p>4. 범죄 감식 및 증거 분석</p>                                             |
| <p>&lt;신 설&gt;</p>                                                                                                                                                                                                                                                                                                                                                                                                                                                                                                                                                                | <p><b>제8조의2(국제정보국)</b></p> <p>① 국제정보국에 정보과·외사과·보안과 및 국제협력과를 두며, 정보과장·외사과장·보안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p> <p>② 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2.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4. 해상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p> <p>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p> <p>③ 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p>2.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p> <p>3. 외사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한 사항</p> <p>5.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p> <p>6. 국제해항에서의 외사활동 계획 및 지도</p> <p>④ 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p> |

|                                                                                                                                                                                                                                                                                                                                                                                                                                                                                                                                                                                                                                                                                                                    |                                                                                                                                                                                                                                                                                                                                                                                                                                                                                                                                                                                                                                                                                                                                                                                                        |
|--------------------------------------------------------------------------------------------------------------------------------------------------------------------------------------------------------------------------------------------------------------------------------------------------------------------------------------------------------------------------------------------------------------------------------------------------------------------------------------------------------------------------------------------------------------------------------------------------------------------------------------------------------------------------------------------------------------------|--------------------------------------------------------------------------------------------------------------------------------------------------------------------------------------------------------------------------------------------------------------------------------------------------------------------------------------------------------------------------------------------------------------------------------------------------------------------------------------------------------------------------------------------------------------------------------------------------------------------------------------------------------------------------------------------------------------------------------------------------------------------------------------------------------|
|                                                                                                                                                                                                                                                                                                                                                                                                                                                                                                                                                                                                                                                                                                                    | <p>2. 보안방첩업무에 관한 사항</p> <p>3. 보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4. 항만에서의 보안활동 계획 및 지도</p> <p>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해양경찰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업무</p> <p>2. 외국 해양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p> <p>3. 해양경찰 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과 관련된 업무</p> <p>4.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p> <p>5. 국제해양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p>                                                                                                                                                                                                                                                                                                                                                                                                                                                                                     |
| <p><b>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생략)</b></p> <p>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연구기획팀·해양경찰연구팀 및 방제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p> <p>③ 연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생략)</p> <p>7.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평가</p> <p>8. 해양경찰·방제에 관한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연구</p> <p>9. (생략)</p> <p>④ 해양경찰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p> <p>2.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p> <p>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p> <p>4. 해양경찰 장비(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p> <p>5.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p> <p>6.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p> <p>⑤ 방제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기술 연구</p> <p>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p> <p>3. ~ 6. (생략)</p> <p>&lt;신 설&gt;</p> | <p><b>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현행과 같음)</b></p> <p>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장비연구팀·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p> <p>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9. (현행과 같음)</p> <p>④ 장비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함정·항공기 운용장비 등 해양경찰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p> <p>2. 해양오염 방제장비에 관한 연구·개발</p> <p>3. 전산시스템 개발 및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연구</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⑤ 화학분석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lt;삭 제&gt;</p> <p>2. 해양경찰 및 오염방제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p> <p>3. ~ 6. (현행과 같음)</p> <p>⑥ 정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해양에서의 재난 대비·대응 및 구조·구난에 관한 연구</p> <p>2. 해양경비·해상교통관제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연구</p> <p>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p> <p>4.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기술에 관한 연구</p> |

|                                                                                                                                                                                                                                                                                                                                                                                                                                                                                                                              |                                                                                                                                                                                                                                                                                                                                                                                                                                                                                                                                                   |
|------------------------------------------------------------------------------------------------------------------------------------------------------------------------------------------------------------------------------------------------------------------------------------------------------------------------------------------------------------------------------------------------------------------------------------------------------------------------------------------------------------------------------|---------------------------------------------------------------------------------------------------------------------------------------------------------------------------------------------------------------------------------------------------------------------------------------------------------------------------------------------------------------------------------------------------------------------------------------------------------------------------------------------------------------------------------------------------|
| <p><b>제20조(지방해양경찰청)</b>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p> <p>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p> <p>2.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p> <p>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p> <p>② 기획운영과장·경비과장·구조안전과장 및 경비안전과장은 총경으로, 수사정보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p> <p>③ ~ ⑤ (생략)</p> | <p><b>제20조(지방해양경찰청)</b>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p> <p>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p> <p>2. 서해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p> <p>3. 동해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p> <p>② 기획운영과장·경비과장·구조안전과장·경비안전과장 및 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정보외사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으로, 청문감사담당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종합상황실장은 경정으로 보한다.</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 <p><b>제24조(기획운영과)</b>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 (생략)</p> <p>12.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p> <p>13.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p> <p>14. ~ 17. (생략)</p>                                                                                                                                                                                                                                                                                                                                                                      | <p><b>제24조(기획운영과)</b>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 &lt;삭 제&gt;</p> <p>14. ~ 17. (현행과 같음)</p>                                                                                                                                                                                                                                                                                                                                                                                           |
| <p><b>제25조(경비과)</b>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생략)</p> <p>9.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p> <p>10. ~ 14.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b>제25조(경비과)</b>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10. ~ 14. (현행과 같음)</p> <p>15.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p> <p>16.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p>                                                                                                                                                                                                                                                                                                                                                                     |
| <p><b>제27조(경비안전과)</b>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4. (생략)</p> <p>25. 소속 해양경찰서의 교육·훈련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무</p> <p>26. ~ 27. (생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b>제27조(경비안전과)</b>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4.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26. ~ 27. (현행과 같음)</p> <p>28. 함정 및 차량의 정비·보급에 관한 사항</p> <p>29. 물품의 수급·보관·출납 및 관리</p>                                                                                                                                                                                                                                                                                                                                                                |
| <p><b>제28조(수사정보과)</b>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생략)</p> <p>8.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p> <p>&lt;신 설&gt;</p>                                                                                                                                                                                                                                                                                                                                                                                                             | <p><b>제28조(수사과)</b>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소속 해양경찰서의 수사 업무에 관한 사항</p> <p><b>제28조의2(정보외사과)</b> 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p>                                                                                                                                                                                                                                                                                                                                                                   |

|                                                                                                                                                                                                                                                                                            |                                                                                                                                                                                                                                                                                                                                  |
|--------------------------------------------------------------------------------------------------------------------------------------------------------------------------------------------------------------------------------------------------------------------------------------------|----------------------------------------------------------------------------------------------------------------------------------------------------------------------------------------------------------------------------------------------------------------------------------------------------------------------------------|
|                                                                                                                                                                                                                                                                                            | <p>2.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4. 해상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p> <p>5. 외사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p> <p>6. 외사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7. 해양치안 관련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p> <p>8.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p> <p>9. 보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p> <p>10.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보·외사·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p> |
| <p><b>제30조(해양경찰서)</b>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보안팀·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두며,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정보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p> <p>②·③ (생략)</p> | <p><b>제30조(해양경찰서)</b>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보안팀·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b>제38조(평가대상 정원)</b>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p>                                                                                                                                                                                                                     | <p><b>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b>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p>                                                                                                                                                                                                                                              |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1. 1. 14 → 2021. 2. 2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58호, 2021. 1. 14.,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73호, 2021. 2. 25., 일부개정]                                                                                                               |
|---------------------------------------------------------------------------------------------------------------------------------------------------------------------|---------------------------------------------------------------------------------------------------------------------------------------------------------------------------|
| <p><b>제3조(기획조정관)</b> ①·② (생략)</p> <p>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p>1. ~ 9. (생략)</p> <p>10.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p> <p>11. ~ 13. (생략)</p> <p>④·⑤ (생략)</p> | <p><b>제3조(기획조정관)</b>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p> <p>1. ~ 9.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11. ~ 1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
| <p><b>제6조(경비국)</b> ① (생략)</p> <p>②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생략)</p> <p>3. 동·서 특정해역 어로 경비</p> <p>4. ~ 13. (생략)</p>                                           | <p><b>제6조(경비국)</b> ① (현행과 같음)</p> <p>②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동·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p> <p>4. ~ 13. (현행과 같음)</p>                                 |

|                                                                                                                                                                                                                                                                                                                              |                                                                                                                                                                                                                                                                                                     |
|------------------------------------------------------------------------------------------------------------------------------------------------------------------------------------------------------------------------------------------------------------------------------------------------------------------------------|-----------------------------------------------------------------------------------------------------------------------------------------------------------------------------------------------------------------------------------------------------------------------------------------------------|
| ③·④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b>제10조(장비기술국)</b> ①·② (생략)<br>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5. (생략)<br><b>&lt;신설&gt;</b><br>6. ~ 12. (생략)<br><b>13.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b>                                                                                                                                                                                   | <b>제10조(장비기술국)</b>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장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5. (현행과 같음)<br><b>5의2. 해양경찰정비창의 사업성과 평가</b><br>6. ~ 12. (현행과 같음)<br><b>13. 경찰복제 및 의복의 보급·개선</b>                                                                                                                                   |
| ④·⑤ (생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b>제12조(운영지원과)</b>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2. (생략)<br>3. 문서의 <b>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b> 및 도서관 관리<br>4. ~ 8. (생략)<br>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b>단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b> 사항                                                                                                                                                            | <b>제12조(운영지원과)</b>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2. (현행과 같음)<br>3. 문서의 <b>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관리</b> 및 도서관 관리<br>4. ~ 8. (현행과 같음)<br>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 또는 <b>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b> 사항                                                                                                                         |
| <b>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b> ①·② (생략)<br>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2. (생략)<br>3. 문서의 <b>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b> 및 관리<br>4. ~ 9. (생략)<br>④ ~ ⑥ (생략)                                                                                                                                                                                    | <b>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b>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2. (현행과 같음)<br>3. 문서의 <b>분류·접수·발송·심사·편찬·보존</b> 및 관리<br>4. ~ 9. (현행과 같음)<br>④ ~ ⑥ (현행과 같음)                                                                                                                                        |
| <b>제20조(지방해양경찰청)</b>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b>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br><b>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b><br><b>2. 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br>3. (생략)<br>② ~ ⑤ (생략) | <b>제20조(지방해양경찰청)</b>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 및 과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밑에 청문감사담당관 및 종합상황실장을 둔다. 다만, <b>중부·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안전총괄부장 밑에 종합상황실장을 둔다.<br><b>&lt;삭제&gt;</b><br><b>2. 중부·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 및 기획운영과. 이 경우 안전총괄부에 경비과·구조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br>3. (현행과 같음)<br>② ~ ⑤ (현행과 같음) |
| <b>제22조(종합상황실)</b>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b>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br>1. ~ 5. (생략)                                                                                                                                                                                                        | <b>제22조(종합상황실)</b>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보좌한다. 다만, <b>중부·서해</b>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안전총괄부장을 보좌한다.<br>1. ~ 5. (현행과 같음)                                                                                                                                                                        |
| <b>제24조(기획운영과)</b>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3. (생략)<br>4. 문서의 <b>분류·수발</b> 등 문서처리<br>5. ~ 17. (생략)                                                                                                                                                                                                                       | <b>제24조(기획운영과)</b>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3. (현행과 같음)<br>4. 문서의 <b>분류·접수·발송</b> 등 문서처리<br>5. ~ 17. (현행과 같음)                                                                                                                                                                                   |
| <b>제30조(해양경찰서)</b>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b>기획</b>                                                                                                                                                                                                               | <b>제30조(해양경찰서)</b> ① 해양경찰서에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둔다. 다만,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는 <b>기획</b>                                                                                                                                                                                      |

|                                                                                                                                                                                                     |                                                                                                                                                                                                      |
|-----------------------------------------------------------------------------------------------------------------------------------------------------------------------------------------------------|------------------------------------------------------------------------------------------------------------------------------------------------------------------------------------------------------|
| <p>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보안팀·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관리과를 두고, 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 및 해양오염방제과를 둔다.</p> <p>②·③ (생략)</p>                                             | <p>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장비관리과 및 보안팀을 두고, 태안해양경찰서·완도해양경찰서·울산해양경찰서·포항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보령해양경찰서·부안해양경찰서 및 울진해양경찰서에는 기획운영과·경비구조과·해양안전과·수사과·정보외사과·해양오염방제과 및 장비운영관리팀을 둔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9장 한시정원                                                                                                                                                                                            | 제9장 삭제 <2021.2.25>                                                                                                                                                                                   |
| <p><b>제39조(한시정원)</b>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오염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경찰청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p> | <삭 제>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1. 1. 26 → 2021. 3. 2]

| <p>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br/>[대통령령 제31419호, 2021. 1. 26., 일부개정]</p>                                                                                                                             | <p>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br/>[대통령령 제31515호, 2021. 3. 2., 일부개정]</p>                                                                                                                                                                                                                      |
|----------------------------------------------------------------------------------------------------------------------------------------------------------------------------------------------------|--------------------------------------------------------------------------------------------------------------------------------------------------------------------------------------------------------------------------------------------------------------------------------------------|
| <p><b>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b>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p>                                             | <p><b>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b>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p>                                                                                   |
| <p><b>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b>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p> | <p><b>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b>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경력경쟁채용시험등(「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p>                               |
| <p>&lt;신 설&gt;</p>                                                                                                                                                                                 | <p><b>제28조의2(수사부서의 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b></p> <p>①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25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p> <p>1. 서류심사: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응</p> |

|  |                                                                                                                                                                                                                                                                                                                                                                                                                                                  |
|--|--------------------------------------------------------------------------------------------------------------------------------------------------------------------------------------------------------------------------------------------------------------------------------------------------------------------------------------------------------------------------------------------------------------------------------------------------|
|  | <p>시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7명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p> <p>2. 신체검사: 약물검사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p> <p>3. 종합심사: 직무수행능력, 적격성 및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명 이하의 임용후보자를 결정한다.</p> <p>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서류심사위원회 및 수사부서의 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자격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p> <p>④ 「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
|--|--------------------------------------------------------------------------------------------------------------------------------------------------------------------------------------------------------------------------------------------------------------------------------------------------------------------------------------------------------------------------------------------------------------------------------------------------|

### ◆ 보안업무규정

[2020. 8. 4 → 2020. 12. 31]

| 보안업무규정<br>[대통령령 제30895호, 2020. 8. 4., 타법개정]                                                                                                                                                                                                                                                                                      | 보안업무규정<br>[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일부개정]                                                                                                                                                                                                                                                                                                                                                                                                                                              |
|----------------------------------------------------------------------------------------------------------------------------------------------------------------------------------------------------------------------------------------------------------------------------------------------------------------------------------|--------------------------------------------------------------------------------------------------------------------------------------------------------------------------------------------------------------------------------------------------------------------------------------------------------------------------------------------------------------------------------------------------------------------------------------------------------------------------------------------|
| <p><b>제36조(신원조사)</b>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p> <p>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p> <p>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무원 임용 예정자</p> <p>2. ~ 4. (생략)</p> <p>5.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p> <p>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 <p><b>제36조(신원조사)</b>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p> <p>&lt;삭제&gt;</p> <p>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p> <p>1. <u>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u></p> <p>2. <u>비밀취급 인가 예정자</u></p> <p>3. 삭제 &lt;2020. 1. 14.&gt;</p> <p>4. <u>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u></p> <p>&lt;삭제&gt;</p> <p>6. <u>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일 : 2020. 12. 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에 대하여 해당 규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2019. 4. 11. 선고, 2017헌가30)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일부개정]                                                                                                                                                                                                         |
|--------------------------------------------------------------------------------------------------------------------------------------------------------------------------------------------------------|---------------------------------------------------------------------------------------------------------------------------------------------------------------------------------------------------------------------------------------------------------------------------------------|
| <b>제22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 <b>제22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u>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해양과학조사법」[시행 2021. 6.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국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내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관할 해역이나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외국과의 외교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 해양과학조사법<br>[법률 제17057호, 2020. 2. 18., 일부개정] | 해양과학조사법<br>[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일부개정]                                           |
|---------------------------------------------|----------------------------------------------------------------------------------------|
| <b>제1조(목적)</b>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 | <b>제1조(목적)</b> 이 법은 <u>대한민국 국민</u> ,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 |

|                                                                                                             |                                                                                                                                                                                                                                                                                                                                                                                                                                                                                                                                                                                                                                                                                                                                                                                                                                                                                                                                                                                                                     |
|-------------------------------------------------------------------------------------------------------------|---------------------------------------------------------------------------------------------------------------------------------------------------------------------------------------------------------------------------------------------------------------------------------------------------------------------------------------------------------------------------------------------------------------------------------------------------------------------------------------------------------------------------------------------------------------------------------------------------------------------------------------------------------------------------------------------------------------------------------------------------------------------------------------------------------------------------------------------------------------------------------------------------------------------------------------------------------------------------------------------------------------------|
| <p>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lt;신 설&gt;</p>                                                                                          | <p><b>제20조의2(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b></p> <p>① <u>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외국의 영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외국의 대륙붕(이하 “외국 관할해역”이라 한다)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7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가 해당 국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해역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② <u>대한민국 국민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공해 등 조사계획서”라 한다)를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대한민국 국민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계획서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 및 공해 등 조사계획서의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b>제23조(이행 권고)</b>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제21조에 따른</b>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p>              | <p><b>제23조(이행 권고)</b>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b>제20조의 2 및 제21조에 따른</b>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p>                                                                                                                                                                                                                                                                                                                                                                                                                                                                                                                                                                                                                                                                                                                                                                                                                                                                                                            |

◆ 「통합방위법」

[2017. 7. 26 → 2020. 12. 22]

| 통합방위법<br>[법률 제14839호, 2017. 7. 26.,<br>타법개정] | 통합방위법<br>[법률 제17686호, 2020. 12. 22., 일부개정]                                                                                                                                                                                                                                                                                                                                                                 |
|----------------------------------------------|------------------------------------------------------------------------------------------------------------------------------------------------------------------------------------------------------------------------------------------------------------------------------------------------------------------------------------------------------------------------------------------------------------|
| <신 설>                                        | <p><b>제9조의2(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b> ①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정보센터를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협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지의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관계 기관 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

[2020. 12. 10 → 2020. 8.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계적 규모로 확산되면서 금융지원의 방법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재난 피해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나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및 제재의 우려로 금융지원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r>[법률 제17383호, 2020. 6. 9., 일부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r>[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                                                                                                                                                                                                                                   |
|------------------------------------------------------------------------------------------------------------------------------------------------------------------------------------------------------------------------------------------------------------------|-------------------------------------------------------------------------------------------------------------------------------------------------------------------------------------------------------------------------------------------------------------------------------------|
| <p><b>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 ①·② (생 략)</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p> | <p><b>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b> ①·② (행과 같음)</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b>피해기업의 경영 안정</b>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p> |

|                                                                                                                                                                                            |                                                                                                                                                                                                                                                                                                                                                                                                                         |
|--------------------------------------------------------------------------------------------------------------------------------------------------------------------------------------------|-------------------------------------------------------------------------------------------------------------------------------------------------------------------------------------------------------------------------------------------------------------------------------------------------------------------------------------------------------------------------------------------------------------------------|
| <p>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생 략)</p> <p>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p> <p>5. ~ 9. (생 략)</p> <p>④ ~ ⑦ (생 략)</p> | <p>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p> <p>5. ~ 9.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
| <p><b>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b>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 <p><b>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제61조 또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u></p> <p>1.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감사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p> <p>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소속 임직원</p> <p>③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의 규칙을 각각 따른다.</p>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

[2020. 8. 18 → 2020. 10. 20]

| <p><b>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p> <p>[법률 제17479호, 2020. 8. 18., 일부개정]</p>                                                                                                                                                                                                                                                                                                                           | <p><b>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b></p> <p>[법률 제17519호, 2020. 10. 20., 일부개정]</p>                                                                                                                                                                                                                                                                                                                     |
|-----------------------------------------------------------------------------------------------------------------------------------------------------------------------------------------------------------------------------------------------------------------------------------------------------------------------------------------------------------------------------------------------|------------------------------------------------------------------------------------------------------------------------------------------------------------------------------------------------------------------------------------------------------------------------------------------------------------------------------------------------------------------------------------------|
| <p><b>제65조(치료 및 보상)</b>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b>부상을 입은</b> 경우에는 치료를 <b>실시하고</b>,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b>포함한다</b>)하거나 <b>신체에 장애를 입은</b>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③ (생 략)</p> | <p><b>제65조(치료 및 보상)</b>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b>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b>,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b>포함한다</b>)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020. 2. 18 → 2021. 4. 1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7049호, 2020. 2. 18., 일부개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8062호, 2021. 4. 13., 일부개정]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생략)<br><br><신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br><br>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br><br>② (생략)                                                                                                                           | 제8조(연안사고예방협의회) 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각각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둔다. [시행 2021. 10. 14]<br><br>② (현행과 같음)                                                                                                                                                                                                                                                                                                                                                                                                           |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① (생략)<br><br>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 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br><br>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br><br>④ (생략) |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① (현행과 같음)<br><br>②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br><br><삭제> [시행 2021. 10. 14]<br><br>④ (현행과 같음)                                                                                                                                                                                                                                                                                                                                                                                     |
| 제11조의2(안전교육 수수료)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시행 2021. 10. 14]<br><br>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의 안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br><br>②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br><br>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br><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br><br>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수수료에 관한 증서를 발급한 경우<br><br>3. 제5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

|                                                                                                                                                                                                                                                                                                                                                                                                      |                                                                                                                                                                                                                                                                                                                                                                                                                                                                                                                                                                                                                                                                              |
|------------------------------------------------------------------------------------------------------------------------------------------------------------------------------------------------------------------------------------------------------------------------------------------------------------------------------------------------------------------------------------------------------|------------------------------------------------------------------------------------------------------------------------------------------------------------------------------------------------------------------------------------------------------------------------------------------------------------------------------------------------------------------------------------------------------------------------------------------------------------------------------------------------------------------------------------------------------------------------------------------------------------------------------------------------------------------------------|
|                                                                                                                                                                                                                                                                                                                                                                                                      | <p>된 경우</p> <p>④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위탁기관의 지정과 그 취소 및 위탁업무의 정지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
| <p><b>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b>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은 제외한다)</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⑥ (생략)</p> <p>&lt;신설&gt;</p> | <p><b>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b>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p> <p>&lt;삭제&gt;</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또는 안전관리요원은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14]</p> |
| <p>&lt;신설&gt;</p>                                                                                                                                                                                                                                                                                                                                                                                    | <p><b>제13조의2(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b> [시행 2021. 10. 14]</p> <p>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이하 이 조에서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p>                                                                                                                                                                                                                                         |

|                                                                                                                                                                                                                                                                                                     |                                                                                                                                                                                                                                                                                                                                                                                                     |
|-----------------------------------------------------------------------------------------------------------------------------------------------------------------------------------------------------------------------------------------------------------------------------------------------------|-----------------------------------------------------------------------------------------------------------------------------------------------------------------------------------------------------------------------------------------------------------------------------------------------------------------------------------------------------------------------------------------------------|
|                                                                                                                                                                                                                                                                                                     | <p>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b>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b></p>                                                                                                                                                                                                                                                                             |
| <p><b>제16조(122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b>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122연안순찰대</b>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b>122연안순찰대원</b>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b>제16조(연안순찰대의 편성·운영)</b> ①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연안순찰대</b>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b>연안순찰대원</b>의 자격기준,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p><b>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b>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b>민간연안순찰요원</b>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 <b>민간연안순찰요원</b>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b>민간연안순찰요원</b>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lt;신 설&gt;</p> | <p><b>제17조(연안안전지킴이 위촉)</b>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b>연안안전지킴이</b>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p> <p>② <b>연안안전지킴이</b>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b>연안안전지킴이</b>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b>연안안전지킴이</b>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
| <p>&lt;신 설&gt;</p>                                                                                                                                                                                                                                                                                  | <p><b>제22조의3(청문)</b> 해양경찰청장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위탁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1. 10. 14]</p>                                                                                                                                                                                                                                                                                       |
| <p><b>제2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lt;신 설&gt;</p>                                                                                                                                                                                 | <p><b>제2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1. 10. 14]</p>                                                                                                                                                                                                                                |
| <p><b>제25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2. ~ 5. (생략)</p> <p>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생략)</p>                                                                                        | <p><b>제25조(과태료)</b> [시행 2021. 10. 14]</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p> <p>2.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p> <p>③ (현행과 같음)</p> |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및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의 기한을 연장하고,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려는 사람이 이수할 수 있는 통합형 안전교육을 신설하며, 연안체험활동 시 배치되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수상구조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262호, 2017. 10. 19., 일부개정]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50호, 2020. 12. 23., 일부개정]                                                                                                                                                                                                                                                                                                                                                                                                                                                                                                                                                                                  |
|--------------------------------------------------------------------------------------------------------------------------------------------------------------------------------------------------------------------------------------------------------------------------------------------------------------------------------------------------------------------------------------------------------------------------------------------------------------------------------------------------------------------------------------------------------------------------------------------------------------------------|---------------------------------------------------------------------------------------------------------------------------------------------------------------------------------------------------------------------------------------------------------------------------------------------------------------------------------------------------------------------------------------------------------------------------------------------------------------------------------------------------------------------------------------------------------------------------------------------------------------------------------------------|
| <p><b>제2조(연안체험활동)</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b>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b>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p> <p>2. 3. (생략)</p>                                                                                                                                                                                                                                                                                                                              | <p><b>제2조(연안체험활동)</b>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p> <p>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b>선박법</b>」 제1조의2제1항에 <b>따른 선박이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b>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다만,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상형 체험활동으로 본다.</p> <p>2. 3. (현행과 같음)</p>                                                                                                                                                                                                                                                                                            |
| <p><b>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b>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b>7500원</b>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 <p><b>제6조의2(안전교육 수수료)</b>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b>8천원</b>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
| <p><b>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b>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b>14일</b>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b>14일</b>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p> | <p><b>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b> ①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b>7일</b>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세부현황 및 안전관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b>7일</b>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신고된 기간 동안 실시되는 각각의 연안체험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현장체험활동 건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p> |



|                                                                                                                                                                                                                                                                                                                  |                                                                                                                                                                                                                                                                                           |
|------------------------------------------------------------------------------------------------------------------------------------------------------------------------------------------------------------------------------------------------------------------------------------------------------------------|-------------------------------------------------------------------------------------------------------------------------------------------------------------------------------------------------------------------------------------------------------------------------------------------|
| <p>활동 시작 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 <p>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p><b>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b></p> <p>① ~ ③ (생략)</p> <p>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b>복장 및 장비</b>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⑤ (생략)</p>                                                                                  | <p><b>제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①</b></p> <p>~ ③ (현행과 같음)</p> <p>④ 해양경찰청장은 민간연안순찰요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b>물품 및 경비</b>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b>단체상해보험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b></p> <p>4. <b>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b></p> <p>⑤ (현행과 같음)</p> |
| <p><b>제13조(규제의 재검토)</b>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제5조에 따른 출입통제 장소의 지정·해제: 2014년 8월 22일</p> <p>2.·3. (생략)</p> <p>4.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2014년 8월 22일</p> <p>5. 제8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2014년 8월 22일</p> | <p><b>제13조(규제의 재검토)</b>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2.·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

별표 2의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라.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br>통합교육 | 수상·수중안전 수칙 | 8시간 |
|                         | 관련 법령 등    |     |
|                         | 응급처치       |     |
|                         | 인명구조       |     |

별표 2의 비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상형·수중형 체험활동 통합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상형 체험활동 및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제11조제4항"을 "영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명구조요원"을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교<br>육<br>부<br>관 | 수상형 [ ], 수중형 [ ], 일반형 [ ], 통합형 [ ] |
|------------------|------------------------------------|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4일"을 "7일"로 한다.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 ◇ 제정이유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 운영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업무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법체계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8조).

나.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를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다.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으로 정함(제13조).

라.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제14조).

마.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바.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사.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제21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시행 2020. 6. 4]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  
구 수정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섹터와 관제통신용 채널로 나누어 관제  
할 수 있다고 규정(제7조)

나. 기존 규칙에서 사용하던 “교차수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명칭을 “선박교통관제구  
역 경계”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수정(제8조)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에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의견 추가(제10조제4호)

라. 선박운항통제의 조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히 하고, 「해사안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마. 무역항을 제외한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절차 중 3단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4단계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제12  
조제2항)

바.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은 삭제하고, 시설관리자의 자격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기준  
에 맞게 수정(제17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020. 12. 22 → 2021. 4. 13]

| 낚시 관리 및 육성법<br>[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br>[법률 제18056호, 2021. 4. 13., 일부개정]                                                                                                                                                                                                                                                                                                                                |
|-------------------------------------------------------------------------------------------------------------------------------------------------------------------------------------------------------------------------------------------------------------------------------------------------------------------------------|--------------------------------------------------------------------------------------------------------------------------------------------------------------------------------------------------------------------------------------------------------------------------------------------------------------------------------------------------------------------------------|
| <b>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b> ①·② (생략)<br><br>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br>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br>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br>다고 인정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라 정<br>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br>수 있다.<br><br>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br>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br>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br>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 <b>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b> ①·② (현행과 같<br>음)<br><br>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br>(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br>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br>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br>되면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br>제1항에 따라 정한 낚시제한기준보다 강화된<br>낚시제한기준(기준 항목의 추가를 포함한다)을<br>정할 수 있다.<br><br>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br>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br>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br>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 |

|                         |                                                             |
|-------------------------|-------------------------------------------------------------|
|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어선 사고의 증가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바다 등에서 낚시를 할 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650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으로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낚시어선의 선장에게 일정 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하고, 바다 등에서 낚시를 할 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29923호, 2019. 6. 25., 일부개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0432호, 2020. 2. 18., 일부개정]<br>[2020. 2. 21 시행]                                                                                                                                                                                                                                                                                                                                                                                                                                                                                                                                                                          |
|----------------------------------------------------------------------------------------------------------------------|----------------------------------------------------------------------------------------------------------------------------------------------------------------------------------------------------------------------------------------------------------------------------------------------------------------------------------------------------------------------------------------------------------------------------------------------------------------------------------------------------------------------------------------------------------------------------------------------------------------------------------------------------|
| <b>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b>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br>1. ~ 3. (생 략)<br><신 설><br><신 설> | <b>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b>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br>1. ~ 3. (현행과 같음)<br>4. <u>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u><br>5. <u>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u><br>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u>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u><br>나.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u><br>부칙 제2조(낚시어선의 선장의 승무경력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항제5호나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까지는 같은 목의 개정규정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으로 한다.<br>6.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u>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b>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b> 법 제45조의2제1항에                                                                               | <b>제21조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b> ① 법 제45조의2제1                                                                                                                                                                                                                                                                                                                                                                                                                                                                                                                                                                                                           |

|                                                                                                                                                                   |                                                                                                                                                                                                                                                                                   |
|-------------------------------------------------------------------------------------------------------------------------------------------------------------------|-----------------------------------------------------------------------------------------------------------------------------------------------------------------------------------------------------------------------------------------------------------------------------------|
| <p>다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p>                                                                                                                                 | <p>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p> <p>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u>1. 검정기관의 명칭</u></p> <p><u>2. 검정기관의 대표자</u></p> <p><u>3. 검정기관의 소재지</u></p> <p><u>4. 검정대상</u></p> <p><u>5.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u></p> |
| <p><b>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략)</b></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p> <p>1. ~ 3. (생략)</p> <p>&lt;신설&gt;</p> <p>④ (생략)</p> | <p><b>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b>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b>과 <b>낚시인의 복지향상</b> 등을 위한 <b>교육·홍보</b></u></p> <p>④ (현행과 같음)</p>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2. 18.>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구분          | 설비                                                                                                                                                                                                                                                                                                                                                                                                                                                                                                                                                                                                                                                                                                                                  |
|-------------|-------------------------------------------------------------------------------------------------------------------------------------------------------------------------------------------------------------------------------------------------------------------------------------------------------------------------------------------------------------------------------------------------------------------------------------------------------------------------------------------------------------------------------------------------------------------------------------------------------------------------------------------------------------------------------------------------------------------------------------|
| 1. 안전·구명 설비 | <p>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p> <p>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p> <p>다.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p> <p>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p> <p>마. 난간 손잡이(hand rail)</p> <p>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p> <p>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p> <p>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p> <p>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p> <p>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p> <p>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p> <p>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p> <p><b>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b></p> |

|            |                                                                                                                                                                                     |
|------------|-------------------------------------------------------------------------------------------------------------------------------------------------------------------------------------|
|            | <b>에 한정한다) [시행 2021. 2. 21]</b>                                                                                                                                                     |
| 2. 소화설비    |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br>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 3. 전기설비    |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
| 4. 그 밖의 설비 |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br>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br>다. 삭제 <2019. 2. 8.><br>라. 삭제 <2019. 2. 8.><br>마. 삭제 <2019. 2. 8.><br>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 「수상레저안전법」(1) [시행 2020. 11. 27]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가 준수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br>[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 수상레저안전법<br>[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
|----------------------------------------------------------------------------------------------------------------------------------------------------------------------------------------------------------------------------------------------------------------------------------|-------------------------------------------------------------------------------------------------------------------------------------------------------------------------------------------------------------------------------------------------------------------------------------------------------------------------------------------------------------------------------------------------------------------------------------------|
| <b>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생략)</b><br><b>②</b>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b>③</b>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b>&lt;신 설&gt;</b> | <b>제19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b><br><b>②</b>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u>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br><b>③</b>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b>④</b>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명구조 활동, 사고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신 설>                                                                                                                                                                                                                                                                                                    | <p><b>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b> ① <u>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u>(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u>허가</u>(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p> <p>② <u>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③ <u>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u></p> <p>④ <u>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u></p> |
| <신 설>                                                                                                                                                                                                                                                                                                    | <p><b>제48조의2(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b>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u>수상레저기구의 운영,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p>                                                                                                                                                                                                                                                                                                                                   |
| <p><b>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b>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b>제48조</b>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 <p><b>제51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b>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b>제48조의2</b>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p>                                                                                                                                                                                           |
| <p><b>제58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1의3. (생 략)</p> <p>&lt;신 설&gt;</p> <p>2. ~ 5. (생 략)</p>                                                                                                                                                            | <p><b>제58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1. ~ 1의3. (현행과 같음)</p> <p><u>1의4.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험운전한 자</u></p> <p>2. ~ 5. (현행과 같음)</p>                                                                                                                                                                                                                                                                                                  |
| <p><b>제59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4. 제19조제1항 또는 <b>제2항</b>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 <p><b>제59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 이하의 과태료</u>를 부과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19조제1항 또는 <b>제3항</b>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

|                                                                                                                                                   |                                                                                                                                                                                                                                                                             |
|---------------------------------------------------------------------------------------------------------------------------------------------------|-----------------------------------------------------------------------------------------------------------------------------------------------------------------------------------------------------------------------------------------------------------------------------|
| <p>&lt;신 설&gt;</p> <p>5. ~ 11의3. (생 략)</p> <p>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p> <p>&lt;신 설&gt;</p> <p>② ~ ⑦ (생 략)</p> | <p>4의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p> <p>5. ~ 11의3. (현행과 같음)</p> <p>12. 제48조의2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p> <p>13.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

### ◆ 「수상레저안전법」(2) [시행 2021. 1. 5]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임시검사 대상에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br>[법률 제17332호, 2020. 5. 26., 일부개정]                                                                                                                                                                                               | 수상레저안전법<br>[법률 제17876호, 2021. 1. 5., 일부개정]                                                                                                                                                                                                                                                                             |
|-------------------------------------------------------------------------------------------------------------------------------------------------------------------------------------------------------------------------------------------|------------------------------------------------------------------------------------------------------------------------------------------------------------------------------------------------------------------------------------------------------------------------------------------------------------------------|
| <p><b>제33조(말소등록)</b>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1. ~ 5. (생 략)</p> <p>② (생 략)</p>                                                          | <p><b>제33조(말소등록)</b> ① 소유자는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u>다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p><b>제37조(안전검사)</b>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2. (생 략)</p> <p>3. 임시검사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하는 검사</p> <p>② ~ ⑥ (생 략)</p> | <p><b>제37조(안전검사)</b> ①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u>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전을 위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332호, 2020.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을 갖추 관할 허가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7일간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에서의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도록 임시운항허가의 기간과 구역을 정하는 한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별 교육수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0807호,<br>2020. 6. 30., 타법개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br>[대통령령 제31191호, 2020. 11. 24., 일부개정]                                                                                                                                                                                                                                                                                                                                                                                                                                                                                                                                                                                                                                                                                                                                                                                                                                                                                           |
|------------------------------------------------------|----------------------------------------------------------------------------------------------------------------------------------------------------------------------------------------------------------------------------------------------------------------------------------------------------------------------------------------------------------------------------------------------------------------------------------------------------------------------------------------------------------------------------------------------------------------------------------------------------------------------------------------------------------------------------------------------------------------------------------------------------------------------------------------------------------------------------------------------------------------------------------------------------------------------------------------------|
| <신 설>                                                | <p><b>제27조의2(임시운항허가)</b></p> <p>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운항 구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시운항 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li> <li>2. 임시운항 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li> </ol> <p>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운항허가증을 내줘야 한다.</p> <p>③ 임시운항허가의 기간 및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기간: 7일(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로 한정한다)</li> <li>2. 허가구역: 출발항으로부터 직선으로 10해리 이내</li> </ol> <p>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에게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해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p> <p>◆ 별표 3 제2호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비고 : 가목 및 나목의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p> <p>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1. 2. 28)부터 시행한다.</p>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1) [시행 2020. 8. 28]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20. 2. 28., 일부개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
|-----------------------------------------------------------------------------------------------------------------------------------------------------------------------------------------------------------------------------------------------------------------|-------------------------------------------------------------------------------------------------------------------------------------------------------------------------------------------------------------------------------------------------------------------------------------------------------------------|
| <b>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b><br>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br>1. 2. (생략)<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br>가. ~ 사. (생략)<br><b>&lt;신설&gt;</b><br>4. (생략)                                                  | <b>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b> 법<br>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br>1. 2. (현행과 같음)<br>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br>가. ~ 사. (현행과 같음)<br>아. 「양식산업발전법」<br>4. (현행과 같음)                                                                                             |
| <b>제14조의2(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b> ①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br>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br>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br>3. (생략)<br>② (생략) | <b>제14조의2(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b> ①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br>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br>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br>3.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2) [시행 2020. 11.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시험운전을 위한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10해리 이상 항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중 위험성이 높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운영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그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47호, 2020. 11. 27., 일부개정]                                                                   |
|----------------------------------------------------------------------------------------------------|-----------------------------------------------------------------------------------------------------------------------|
| <b>제5조(수상안전교육)</b> ①·② (생략)<br>③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b>제5조(수상안전교육)</b>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시행 21. 2. 28] |

|                                                                                                                                                                                                                                                                                                                                                                                                                                                                   |                                                                                                                                                                                                                                                                                                                                                                                                                                                                                                                                                                               |
|-------------------------------------------------------------------------------------------------------------------------------------------------------------------------------------------------------------------------------------------------------------------------------------------------------------------------------------------------------------------------------------------------------------------------------------------------------------------|-------------------------------------------------------------------------------------------------------------------------------------------------------------------------------------------------------------------------------------------------------------------------------------------------------------------------------------------------------------------------------------------------------------------------------------------------------------------------------------------------------------------------------------------------------------------------------|
| <p>&lt;신 설&gt;</p>                                                                                                                                                                                                                                                                                                                                                                                                                                                | <p>④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
| <p><b>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b>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u>를 착용하여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②·③ (생 략)</p> | <p><b>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b>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u>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u>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p><b>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b>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 <p><b>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b></p> <p>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u>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p> <p>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u>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li> <li>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li> </ol> |
| <p><b>제16조(사고의 신고)</b>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 <p><b>제16조(사고의 신고)</b>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
| <p>&lt;신 설&gt;</p>                                                                                                                                                                                                                                                                                                                                                                                                                                                | <p><b>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b>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u>”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u></li> <li>2. <u>소화기</u></li> <li>3. <u>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u></li> </ol>                                                                                                                                                                                                                                                                                                                           |

|                                                                                                                                                                                                                                                                                                                                       |                                                                                                                                                                                                                                                                                                                                                                                                                                                                                                                                                                  |
|---------------------------------------------------------------------------------------------------------------------------------------------------------------------------------------------------------------------------------------------------------------------------------------------------------------------------------------|------------------------------------------------------------------------------------------------------------------------------------------------------------------------------------------------------------------------------------------------------------------------------------------------------------------------------------------------------------------------------------------------------------------------------------------------------------------------------------------------------------------------------------------------------------------|
|                                                                                                                                                                                                                                                                                                                                       | <p>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u>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 계획서 및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p> <p>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증은 별지 제34호의4서식과 같다.</p>                                                                                                                                                                                                                                                                                                                                                    |
| <p><b>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b> ①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b>제출하여야</b>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b>별표 9의2</b>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p> <p>1. ~ 7. (생략)</p> <p>② ~ ⑤ (생략)</p> | <p><b>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b>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b>제출해야</b>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b>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b>에 해당하는 수상레저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 <p>&lt;신 설&gt;</p>                                                                                                                                                                                                                                                                                                                    | <p><b>제3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b>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u>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u></p> <p>[별표 11] &lt;신설 2020. 11. 27.&gt;</p> <p style="text-align: center;">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br/>(블롭점프)<br/>준수사항</p> <p>가. 에어매트의 공기주입구 및 표면,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p> <p>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p> <p>다.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p> <p>라. 이용자가 구멍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p> <p>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0. 11. 27.>

|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                                              |
|-------------------------------------------------|----------------------------------------------|
| 1.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 |                                              |
| 항목                                              | 내용                                           |
| 사업장 기준                                          |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                                                                                                                                                                                                                                                                                                                                                                                                              |                                                                                                                                                                                                                                                                                                                                                                                                                                                       |
|------------|----------------------------------------------------------------------------------------------------------------------------------------------------------------------------------------------------------------------------------------------------------------------------------------------------------------------------------------------------------------------------------------------------------------------------------------------|--------------------------------------------------------------------------------------------------------------------------------------------------------------------------------------------------------------------------------------------------------------------------------------------------------------------------------------------------------------------------------------------------------------|-------------------------------------------------------------------------------------------------------------------------------------------------------------------------------------------------------------------------------------------------------------------------------------------------------------------------------------------------------------------------------------------------------------------------------------------------------|
| 영업구역       |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                                                                                                                                                                                                                                                                                                                                                                                                              |                                                                                                                                                                                                                                                                                                                                                                                                                                                       |
| 자격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 (세일링요트만을 이용한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li> <li>-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이 제2급 조종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 [15 경정승진, 18 해경]</li> <li>-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를 갖춘 사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li> <li>- 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li> </ul> |                                                                                                                                                                                                                                                                                                                                                                                                              |                                                                                                                                                                                                                                                                                                                                                                                                                                                       |
| 수상레저기구     | 공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여야 하고,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기구여야 한다.</li> </ul>                                                                                                                                                                                                                                                                         |
|            |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 블록 점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한다.</li> <li>-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해야 한다.</li> <li>- 에어매트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표시해야 한다.</li> <li>-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해야 한다.</li> <li>-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li> </ul> |
|            |                                                                                                                                                                                                                                                                                                                                                                                                                                              | 위터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li> <li>- 위터파크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li> <li>- 위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위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li> <li>-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li> </ul>                                                                                                                                      |
| 인명구조용 장비 등 | 구명조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17 경정·경감승진, 18 해경, 19 경감승진]</li> <li>- 구명조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li> </ul>                                                                                                                                                                      |                                                                                                                                                                                                                                                                                                                                                                                                                                                       |
|            | 안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터슬레드,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록점프)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며,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격 흡수성이 있을 것</li> <li>·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li> <li>·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li> <li>·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li> <li>·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할 것</li> </ul> </li> </ul> |                                                                                                                                                                                                                                                                                                                                                                                                                                                       |

|  |           |                                                                                                                                                                                                                                                                                                                                                                                                                                                                                                                                                                                                                                                                                                                                                                                                                                                                                                                                                                                                                                                                                                                                                                   |
|--|-----------|-------------------------------------------------------------------------------------------------------------------------------------------------------------------------------------------------------------------------------------------------------------------------------------------------------------------------------------------------------------------------------------------------------------------------------------------------------------------------------------------------------------------------------------------------------------------------------------------------------------------------------------------------------------------------------------------------------------------------------------------------------------------------------------------------------------------------------------------------------------------------------------------------------------------------------------------------------------------------------------------------------------------------------------------------------------------------------------------------------------------------------------------------------------------|
|  | 비상구조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13 해경]</li> <li>•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li> <li>•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 2대 이상의 비상구조선</li> <li>•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li> <li>- 비상구조선은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li> <li>-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노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원경 1개 이상</li> <li>• 구명튜브 5개 이상 또는 1자형 튜브 1개 이상</li> <li>• 호루라기 1개 이상</li> <li>• 30미터 이상의 구명줄</li> </ul> </li> <li>-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18 해경]]</li> </ul> |
|  | 구명튜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튜브를 갖추어야 한다.</li> <li>-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튜브를 갈음하여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출 수 있다.</li> <li>-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li> </ul>                                                                                                                                                                                                                                                                                                                                                                                                                                                                                                                                                                                                                                                                                                                                                                                                                                                                                      |
|  | 구명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li> </ul>                                                                                                                                                                                                                                                                                                                                                                                                                                                                                                                                                                                                                                                                                                                                                                                                                                                                                                                                                                                                                                         |
|  | 예비용 노·상앗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li> <li>-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li> </ul>                                                                                                                                                                                                                                                                                                                                                                                                                                                                                                                                                                                                                                                                                                                                                                                                                                                                                                                                                                   |
|  | 통신장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li> </ul>                                                                                                                                                                                                                                                                                                                                                                                                                                                                                                                                                                                                                                                                                                                                                                                                                                                                                                                                                                                                                                            |
|  | 소화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li> </ul>                                                                                                                                                                                                                                                                                                                                                                                                                                                                                                                                                                                                                                                                                                                                                                                                                                                                                                                                                                         |
|  | 인명구조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li> </ul>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li> <li>-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li> <li>-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li> <li>- <b>블롭점프 및 워터파크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기구마다 각각 두어야 한다.</b></li> </ul> |
|--|-------------------------------------------------------------------------------------------------------------------------------------------------------------------------------------------------------------------------------------------------------------------------------------------------------------------------------------------------------------------------------------------------------------------------------------------------------|

2.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

| 항목     | 내용                                                                                                                                                                                                                      |
|--------|-------------------------------------------------------------------------------------------------------------------------------------------------------------------------------------------------------------------------|
| 사업장 기준 |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
| 수상레저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li> <li>-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 이외의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검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li> </ul> |

◆ 「어선안전조업법」 [2020. 8. 28 시행]

◇ 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되, 일정한 범위의 어업지도선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

나.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

다. 어선은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지 못하도록 함(제9조).

라.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해역에서의 어



업별 조역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사.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선船)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도록 함(제15조).

아.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일부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도록 하고, 그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21조).

카.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도록 하고,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이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4조).

### ◆ 「선박안전 조업규칙」[시행 2020. 8. 28.]

| 선박안전 조업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타법개정]                                                                                   | 선박안전 조업규칙<br>[해양수산부령 제433호, 2020. 8. 28., 타법개정]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박에 대한 어업 및 항행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과 항해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어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 제3조(어로한계선) (생략)                                                                                                                   | <삭 제>                                                                                                                         |
| 제4조(성어기의 설정 등) (생략)                                                                                                               | <삭 제>                                                                                                                         |
| 제5조(조업해역의 구분) (생략)                                                                                                                | <삭 제>                                                                                                                         |
| 제6조(조업자제선) (생략)                                                                                                                   | <삭 제>                                                                                                                         |
| 제7조(어로보호본부) (생략)                                                                                                                  | <삭 제>                                                                                                                         |
| 제8조(어로보호협의회) (생략)                                                                                                                 | <삭 제>                                                                                                                         |
| 제9조(출항·입항 신고기관의 설치) (생략)                                                                                                          | <삭 제>                                                                                                                         |
| 제10조(통제소) (생략)                                                                                                                    | <삭 제>                                                                                                                         |
| 제12조(신고소) (생략)                                                                                                                    | <삭 제>                                                                                                                         |
| 제13조(대행신고소) (생략)                                                                                                                  | <삭 제>                                                                                                                         |
| 제14조(관할 군부대장의 통제) (생략)                                                                                                            | <삭 제>                                                                                                                         |
| 제15조(출항·입항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면 어선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                                                                         | 제15조(출입항의 신고) ① 선박이 항포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                                                                |



|                                                                                                                                                                                                                                                                                                                                                                                                                                                                                                               |                                                                                                                                                                                                                                                                                                                                                                                                                                               |
|---------------------------------------------------------------------------------------------------------------------------------------------------------------------------------------------------------------------------------------------------------------------------------------------------------------------------------------------------------------------------------------------------------------------------------------------------------------------------------------------------------------|-----------------------------------------------------------------------------------------------------------------------------------------------------------------------------------------------------------------------------------------------------------------------------------------------------------------------------------------------------------------------------------------------------------------------------------------------|
| <p>를, 그 밖의 선박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출(입)항 신고서를 2부씩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후 그 중 1부는 신고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출항·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6항에 따른 어선 구비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이하 “선박출입항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출항·입항 전에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항·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갖추고 처음으로 출항·입항하는 경우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p>(입)항신고(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선원명부를 출입항하려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신고기관(「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해당 확인서를 선박에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선원명부 또는 선박출(입)항신고(확인)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p> <p>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제14조의2에 따른 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p> |
| 제16조(어선 출어등록) (생략)                                                                                                                                                                                                                                                                                                                                                                                                                                                                                            | <삭 제>                                                                                                                                                                                                                                                                                                                                                                                                                                         |
| 제17조(어선단 조업) (생략)                                                                                                                                                                                                                                                                                                                                                                                                                                                                                             | <삭 제>                                                                                                                                                                                                                                                                                                                                                                                                                                         |
|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생략)                                                                                                                                                                                                                                                                                                                                                                                                                                                                                        | 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선박이 그 지정된 경유지를 거쳐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 <삭 제>                                                                                                                                                                                                                                                                                                                                                                                                                                         |
| 제19조(어로 또는 항해의 금지) (생략)                                                                                                                                                                                                                                                                                                                                                                                                                                                                                       | <삭 제>                                                                                                                                                                                                                                                                                                                                                                                                                                         |
| 제20조(월선의 금지 등) (생략)                                                                                                                                                                                                                                                                                                                                                                                                                                                                                           | <삭 제>                                                                                                                                                                                                                                                                                                                                                                                                                                         |
|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생략)                                                                                                                                                                                                                                                                                                                                                                                                                                                                                      | <삭 제>                                                                                                                                                                                                                                                                                                                                                                                                                                         |
| 제22조(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어로 제한) (생략)                                                                                                                                                                                                                                                                                                                                                                                                                                                                                | <삭 제>                                                                                                                                                                                                                                                                                                                                                                                                                                         |
| 제23조(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 (생략)                                                                                                                                                                                                                                                                                                                                                                                                                                                                              | <삭 제>                                                                                                                                                                                                                                                                                                                                                                                                                                         |
| 제25조(의심스러운 선박의 보고) (생략)                                                                                                                                                                                                                                                                                                                                                                                                                                                                                       | <삭 제>                                                                                                                                                                                                                                                                                                                                                                                                                                         |
| 제26조(경보청취의무) (생략)                                                                                                                                                                                                                                                                                                                                                                                                                                                                                             | <삭 제>                                                                                                                                                                                                                                                                                                                                                                                                                                         |
| 제27조(위험 및 대피신호에 대한 대비) (생략)                                                                                                                                                                                                                                                                                                                                                                                                                                                                                   | <삭 제>                                                                                                                                                                                                                                                                                                                                                                                                                                         |
| 제28조(정선명령의 준수) (생략)                                                                                                                                                                                                                                                                                                                                                                                                                                                                                           | <삭 제>                                                                                                                                                                                                                                                                                                                                                                                                                                         |
|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생략)                                                                                                                                                                                                                                                                                                                                                                                                                                                                              | <삭 제>                                                                                                                                                                                                                                                                                                                                                                                                                                         |
| 제30조(지도·감독) (생략)                                                                                                                                                                                                                                                                                                                                                                                                                                                                                              | <삭 제>                                                                                                                                                                                                                                                                                                                                                                                                                                         |
| 제31조(범법 선박에 대한 조치) (생략)                                                                                                                                                                                                                                                                                                                                                                                                                                                                                       | <삭 제>                                                                                                                                                                                                                                                                                                                                                                                                                                         |

## ◆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경찰청훈령 제188호]

### [제정·개정문]

- 해양경찰청훈령 제188 호  
 (해양경찰청) 선박통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8월 2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선박통제규정 전부개정 훈령

(해양경찰청) 선박통제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출입항 신고기관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 20.8.28.) 일에 맞추어 현행 행정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출입항 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현 실정 반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선박통제규정」에서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으로 변경

나. 종전의 「어선과 100톤미만 선박」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상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어선」으로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별도 기준이 없어 민원서류 기준 3년간 보존했던 출입항 신고서에 대해 어선출입항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보존의무 폐지(안 제4조)

라. 선박패스 시스템상 항포구 출입항구역 설정의무를 부여하고, 의무자를 해양경찰서장으로 지정(안 제6조)

마. 대행신고소 설치제외 기준 명문화(안 제7조)

바. 종전의 「해양경찰기 및 관서 제표지 규칙(예규)」에 규정되었던 대행신고소 현판 규칙에 대한 내용이 삭제됨으로 인해 별도로 신설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전(全)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소·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 검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를 필요한 경우
6.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7. 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 **제9조(수사기관협의회)**

- ①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간에 수사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
- ② 수사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
  - 2. 국가적 재난 상황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수사기관협의회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③ 수사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사기관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0조(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력)**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제15조(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때
  2.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해야 한다.

####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제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

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시설의 보호·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 **제25조(자료·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응인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신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제31조(체포·구속영장의 재청구·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 **제32조(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제33조(체포·구속 등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구속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34조(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 **제35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 **제36조(피의자의 석방)**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장소, 석방 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제39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재신청 등)**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재신청(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 **제43조(검증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절 시정조치요구**

####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송치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4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 **제1절 통칙**

####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법원송치
  2. 검찰송치
  3. 불송치
    - 가.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나. 죄가안됨
    - 다. 공소권없음
    - 라. 각하
  4. 수사중지
    - 가. 피의자중지
    -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 **제52조(검사의 결정)**

-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 3. 기소중지
- 4. 참고인중지
- 5. 보완수사요구
- 6. 공소보류
- 7. 이송
- 8. 소년보호사건 송치
- 9. 가정보호사건 송치
-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 제5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등)

-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 참고인증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1항, 이 조 제1항 등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청**

####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
-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제5장 보칙**

####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

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거나 제53조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 ④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 ① 이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1089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시행 2021. 5. 12.]

|                                                                       |
|-----------------------------------------------------------------------|
| ◇ 제·개정 이유                                                             |
| 수사국 출범(1.14.) 후 부서명칭("수사정보국" → "수사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수사국 소관 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
| ◇ 주요내용                                                                |
| 가. 제6조 제1항 1호의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

◆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시행 2021. 5. 12.]

|                                                                       |
|-----------------------------------------------------------------------|
| ◇ 제·개정 이유                                                             |
| 수사국 출범(1.14.) 후 부서명칭("수사정보국" → "수사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수사국 소관 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
| ◇ 주요내용                                                                |
| 가. 별표 2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을 "수사국장"으로 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수사과장"으로 한다        |

◆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시행 2021. 5. 12.]

|                                                                                      |
|--------------------------------------------------------------------------------------|
| ◇ 제·개정 이유                                                                            |
| 수사국 출범(1.14.) 후 부서명칭("수사정보국" → "수사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수사국 소관 9개 행정규칙 일괄개정                |
| ◇ 주요내용                                                                               |
| 가. 제25조 제2항의 "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수사정보과장"을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지방해양경찰청의 경우 수사과장"으로 한다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7068호, 2020. 3. 4., 타법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br>[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
|-----------------------------------------------------------------------------------------------------------------------------------------------------|---------------------------------------------------------------------------------------------------------------------------------------------------------------------------------------------|
|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 (생략)<br>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3. (현행과 같음)<br>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                                                                                                                                                                                                                                                                                                                           |
|------------------------------------------------------------------------------------------------------------------------------------------------------------------------------------------------------------------------------------------|---------------------------------------------------------------------------------------------------------------------------------------------------------------------------------------------------------------------------------------------------------------------------------------------------------------------------|
| <p><b>제5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b>18명</b>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b>3명</b>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b>한다</b>.</p> <p>1. 2. (생 략)</p> <p>④ ~ ⑥ (생 략)</p> | <p><b>제5조(협의회의 구성)</b>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b>25명</b>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b>7명</b>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b>하되</b>, 이 중 <b>1명</b>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b>한다</b>.</p> <p>1. 2.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 <p><b>&lt;신 설&gt;</b></p>                                                                                                                                                                                                                | <p><b>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b></p> <p>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p><b>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b><br/>[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p>                                                                                                                                                                | <p><b>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b><br/>[법률 제17565호, 2020. 12. 8., 일부개정]</p>                                                                                                                                                                                                                                                                                                                          |
|--------------------------------------------------------------------------------------------------------------------------------------------------------------------------------------------------------------------------------------------|------------------------------------------------------------------------------------------------------------------------------------------------------------------------------------------------------------------------------------------------------------------------------------------------------------------------------------------------------------------------------------------------------|
| <p><b>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b>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p> <p>5. (생 략)</p> <p>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 <p><b>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b>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 사범죄자</p> <p>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p> <p>3. 위장탈출 혐의자</p> <p><b>&lt;삭 제&gt;</b></p> <p>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p> <p>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

|                                                                                                                                                                                                                                                                                                                                                            |                                                                                                                                                                                                                                                                                                                                                      |
|------------------------------------------------------------------------------------------------------------------------------------------------------------------------------------------------------------------------------------------------------------------------------------------------------------------------------------------------------------|------------------------------------------------------------------------------------------------------------------------------------------------------------------------------------------------------------------------------------------------------------------------------------------------------------------------------------------------------|
|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p> <p>2. (생 략)</p> <p>④ (생 략)</p> | <p>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의3·제19조·제19조의2·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 「출입국관리법」

[2020. 10. 20 → 2021. 3. 16]

| 출입국관리법<br>[법률 제17509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br>[법률 제17934호, 2021. 3. 16., 일부개정]                                                                                                                                                                                                                                                                                                                                  |
|-------------------------------------------------------------------------------------------------------------------------------------------------------------------------------------------------------------------------------------------------------------------------------------------------------------------------------------|-----------------------------------------------------------------------------------------------------------------------------------------------------------------------------------------------------------------------------------------------------------------------------------------------------------------------------------------------------------------------------|
| <p><b>제4조(출국의 금지) ① (생 략)</b></p> <p>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p> <p>1. 소재를 알 수 없어 <b>기소중지결정이 된</b>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p> <p>2. <b>기소중지결정이 된</b>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p> <p>③ ~ ⑤ (생 략)</p> | <p><b>제4조(출국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b></p> <p>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p> <p>1. 소재를 알 수 없어 <b>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b>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p> <p>2. <b>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b>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여권법」

[2021. 1. 5 → 2021. 4. 20]

| 여권법<br>[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 여권법<br>[법률 제18080호, 2021. 4. 20., 일부개정]                                                                                                                                                                                                                                             |
|--------------------------------------------------------------------------------------------------------------------------------------------------------------------------------------------------------------------------------------------------------|-------------------------------------------------------------------------------------------------------------------------------------------------------------------------------------------------------------------------------------------------------------------------------------|
| <b>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b><br>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br>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b>기소중지되거나</b>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br>2. ~ 4. (생략)<br>② ~ ④ (생략) | <b>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b><br>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br>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b>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b>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br>2. ~ 4. (현행과 같음)<br>② ~ ④ (현행과 같음)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2017. 7. 26 → 2021. 1. 5]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br>[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br>[법률 제17825호, 2021. 1. 5., 일부개정]                                                                                                                                                                                                                                                                                                                                                                               |
|-----------------------------------------------------------------------------------------------------------------------------------------------------------------------------------------------------------------------------------------------------------------------------------------------------------------------------------------------------------|-----------------------------------------------------------------------------------------------------------------------------------------------------------------------------------------------------------------------------------------------------------------------------------------------------------------------------------------------------------------------------------------------------------------------------|
| <b>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b>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b>한다</b> )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b>하도록 명하는 것</b><br>2. (생략)<br>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b>법원 또는 검사가</b>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b>법원 또는 검사</b> 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br>③ (생략) | <b>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b>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br>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b>한다</b> ) 또는 <b>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b>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b><br>2. (현행과 같음)<br>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b>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b>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br>③ (현행과 같음) |
| <b>제16조(검사장의 조치)</b>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b>검사장</b> 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                                                                                                                                                                                                                                                                                        | <b>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b>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b>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b>                                                                                                                                                                                                                                                                                                                                                      |

|                                                                                                                                        |                                                                                                                                                                      |
|----------------------------------------------------------------------------------------------------------------------------------------|----------------------------------------------------------------------------------------------------------------------------------------------------------------------|
| 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b>범죄수사처장</b> 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b>제20조(관할 법원)</b>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b>지방법검찰청</b> 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br>② (생략)                  | <b>제20조(관할 법원)</b>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b>지방법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b> 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br>② (현행과 같음)                              |
| <b>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b>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b>명령을 받은 검사장</b> 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br>②·③ (생략)       | <b>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b>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b>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br>②·③ (현행과 같음)            |
| <b>제29조(검사의 공조요청)</b> <b>검사</b> 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b>제29조(검사 등의 공조요청)</b> <b>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 <b>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b>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b>&lt;단서 신설&gt;</b> | <b>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b>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b>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

## 「범죄인 인도법」

[2016. 1. 6 → 2021. 1. 5]

| 범죄인 인도법<br>[법률 제13722호, 2016. 1. 6., 다법개정]                                                                                                     | 범죄인 인도법<br>[법률 제17827호, 2021. 1. 5., 일부개정]                                                                                                                              |
|------------------------------------------------------------------------------------------------------------------------------------------------|-------------------------------------------------------------------------------------------------------------------------------------------------------------------------|
| <b>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b> ① (생략)<br>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b>검사장·지청장</b>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b>제42조(법무부장관의 인도청구 등)</b> ① (현행과 같음)<br>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b>검사장·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
| <b>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b>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b>명령을 받은 검사장·지청장</b>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b>제42조의2(검사장 등의 조치)</b> ① 제42조제2항에 따른 <b>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지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b> 등은 소속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작성·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b>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b><br>① <b>검사</b> 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b>건의</b> 할 수 있다. | <b>제42조의3(검사의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b> ① <b>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b>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b>건의 또는 요청</b> 할 수 있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b>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b> ① (생 략)<br>② <b>검사</b> 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b>건의</b>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 제2항을 준용한다.          | <b>제42조의4(외국에 대한 동의 요청)</b> ① (현행과 같음)<br>② <b>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b> 제1항에 따른 동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동의 요청을 <b>건의 또는 요청</b>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
| <b>제47조(검찰총장 경유)</b>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 <b>제47조(검찰총장 경유)</b>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b>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

◆ 「해양환경관리법」[시행 2021. 1. 1]

| 해양환경관리법<br>[법률 제16699호, 2019. 12. 3., 타법개정]                                                                                                                                                                                  | 해양환경관리법<br>[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
|------------------------------------------------------------------------------------------------------------------------------------------------------------------------------------------------------------------------------|--------------------------------------------------------------------------------------------------------------------------------------------------------------------------------------------------------------------------------------------------------------------------------------------------------------------------------------------------------------------------------------------------------|
| <b>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b>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b>해양수산부장관</b> 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신 설><br><br><신 설><br>② (생 략) | <b>제33조(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b> ① 해양시설의 소유자(설치·운영자를 포함하며, 그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설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b>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b> 에게 그 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br><br>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b>배타적 경제수역</b>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b>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 해양수산부장관</b><br><br>2. <b>제1호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 시·도지사</b><br>② (현행과 같음) |
| <b>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b> ① (생 략)<br>② <b>해양수산부장관</b>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                                                               | <b>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b> ① (현행과 같음)<br>② <b>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b> (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



|                                                                                                        |                                                                                                                                                 |
|--------------------------------------------------------------------------------------------------------|-------------------------------------------------------------------------------------------------------------------------------------------------|
| <p>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③ ~ ⑦ (생략)</p> | <p>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
| <p><b>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b>이 부과·징수한다.</p>   | <p><b>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b>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b> 부과·징수한다.</p>                                     |